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

- 21세기 미래사회의 새로운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의 모색 -

1. 서 론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조망하는 일은 미래사회의 변화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정보화와 개방화로 표출되고 있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적 패러다임 변혁기의 일 국가적 대응전략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청소년육성 체제와 행태를 검토하고 새로운 청소년육성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기존의 청소년육성 체제의 조직원리와 이념을 일종의 근대 산업사회의 역사적 생성물로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원리와 이념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래사회 변화추세의 특성과 개혁과제를 추출하고 아울러 청소년육성의 대안적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대안적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의 배분형태, 관련기구의 조직원리는 무엇인가 등의 청소년육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기존의 중·장기 계획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특성을 갖는다. 우선 기존의 청소년육성 중·장기 계획은 목표 중심적인 행정적 집행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근대적 육성체제의 역사성을 전제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기본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육성 관련전문가와 행정종사자들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평면적으로 나열·기술하기 보다는 청소년육성의 장기전략에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육성 체제의 재구조화의 원리를

제기하며, 그 해결대안 모색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정책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제해결을 위한 기본여건과 조직원리의 점검과 전략의 제시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미래사회의 특성

21세기를 향한 사회 변화는 급격한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 및 변화의 가속성·연속성을 지니며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변화의 특성과 원리 및 변화양상을 정교하게 분석해내는 일은 미래사회의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인류역사는 농업사회·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회 변화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혁명을 동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의 원리와 방향성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표준화에서 다양화로의 변화, 전문화에서 탈전문화로의 변화, 동시화에서 탈동시화로의 변화, 집중화에서 분산화로의 변화, 극대화에서 소규모화로의 변화, 중앙집권화에서 분권화로의 변화이다.

한편 21세기 미래사회 변화의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 사회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 첨단기술 사회,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 세계화 사회, 다원화 사회가 그것이다.

(1) 정보화 사회는 정보·지식이 권력 및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정보·지식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등장한다. 생산자원인 정보의 성격상 소유형태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적·유형적 소유에서 무형적·지적 소유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평적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정보가 곧 부의 원천이 되므로 정보의 신속한 습득·처리·이용·능력이 요구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가변성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체제가 요구된다.

(2) 첨단기술 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풍요의 기반이 제공되는 사회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 세계적 정보교환

체제의 형성,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다중선택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오염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들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학·자연·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과제가 대두된다.

(3)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위계적 명령체제가 하위단위의 소규모 체제간의 연계를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한이 분산되고 세분된 단위는 자치적이며 동시에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망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네트워크형의 조직형태는 정부, 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피라미드형의 위계체제는 더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 세계화 사회는 전 세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역작용으로 경제단위는 축소되고 각 경제단위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치열한 무한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화·블럭화된 경제상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한편 국가의 형태는 과거 주권국가 형태에서 탈피하여 거대국가 체제로 나아가며 역시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족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현상을 나타낸다.

(5) 다원화 사회는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서 정신적 풍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다양화, 개성화, 탈대중화 등의 원리가 기본이 되는 사회이다. 정신적 가치와 만족을 추구하므로 문화·예술 산업이 부흥할 것이며, 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 참여도 증가하고, 여행·레저 산업도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 및 소비패턴도 개인중심의 개성적 선택이 중시되어 산업체제도 그에 맞게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주문생산의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의 특성들은 21세기에 대비하는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질적 대전환의 인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간성 회복과 인간의 선발이 아닌 인적 자원의 육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미래사회의 운영원리와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육성의 방향 : 유사계몽적 패러다임에서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유사계몽적 패러다임 :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과 육성 제도 및 체계는 근대사회의 역사적 현상이며 근대국가에 의해 창출된 일종의 사회적 이념과 제도로 인식된다. 청소년의 정신에 지식이라는 문자가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근대사회의 청소년교육과 육성의 계몽적 패러다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가르치는 행위중심의 논리에 바탕을 둔 교수받는 장소로서 ‘학교’와, 교수받은 형식적인 경력으로서 ‘학력(學歷)’이라는 요소가 중심체계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제도의 조직원리는 근대화의 주된 방향이었던 『민주화』와 『산업화』를 주축으로 하고, 조직원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적 원칙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에게 교육이나 각종 활동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회는 신분이나 혈연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진다. 또한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조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조직의 합리적 운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가르치고 키우기 위한 근대적 기관과 조직들은 능력주의적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 패러다임 : 파트너쉽이 함유하고 있는 관계의 의미는 일정한 목표달성과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서 다른 인적 자원이나 기구, 조직과의 연계관계에 관한 것이다.

파트너쉽에 의한 재구조화는 더 많은 자원의 배분(greater sharing of resources), 보다 심도있는 공동기획(more intense joint planning) 및 힘과 권위의 분산을 전제한다. 즉, 파트너쉽은 배분된 힘과 권위에 바탕을 둔 협동적 시도를 의미하며, 과도한 인적 자원에 대한 경비를 축소하고 청소년이라는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재원의 배분을 포함한 각종 자원의 공동배분과 분배과정에서의 경쟁기제를 도입한다.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의 육성 패러다임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유효한가 하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삶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책임을 갖는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기구에게 각종 자원과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는다.

■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 패러다임의 3차원 : (1) 인간관계 차원의 파트너쉽으로서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관계로서 파트너쉽은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 청소년과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단체, 시설, 교훈적 활동장의 교사, 전문가나 지도자와의 관계, 청소년의 일차적인 관여자이며 교육자인 부모와 교사, 전문가나 지도자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2) 지역사회와 다양한 청소년육성 관련기구나 자원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향해 통합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간의 파트너쉽으로서, 지역사회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민간기업이나 문화센타를 비롯하여, 각종 관공서, 공공시설 및 단체, 도서관 등의 다양한 시설과 인적 자원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의 공간 또는 자원으로 동원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연계망의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기능차원의 파트너쉽으로서 청소년교육과 육성기능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미래사회에서 지성연마를 중심으로 한 학교활동과 체험활동을 중핵으로 한 교육과 육성활동의 상호연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 : (1)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은 다수결원리와 소수파의 권리보장, 개인의 관심과 집단의 관심, 지역사회의 가치와 사회 전체의 가치, 전문가의 자율과 일반 공중에 대한 책임 등의 조정과 균형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듯이, 청소년육성에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분권화,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각종 의사참여 기구와 서비스 기구, 부모, 청소년간의 권한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2) 청소년 활동과 서비스의 다양성의 원리이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 권력의 분산, 다양한 가치의 공존, 고도로 분화된 직업적·기술적 요구가 존재하고 정보

에 대한 접근과 매체에 대한 이용과 접근 가능성에 따른 계층화된 문화적 배경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의욕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청소년육성의 재구조화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전환을 요구한다.

- ▶ 청소년육성을 둘러싼 각종 자원, 조직,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및 지도, 인사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거점 중심적 의사결정(site-based decision making)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 ▶ 청소년과 부모, 특히 부모의 참여와 선택에 바탕을 둔 시장지향적 접근으로의 변화(a shift to a market-driven orientation)가 고려되어야 한다.
- ▶ 기술공학적 도구와 정보매체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의 진작이 재구조화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 ▶ 청소년육성 체제의 재구조화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전제하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 ▶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청소년 육성의 주요 과제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제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와 행정종사자 및 학계의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델파이 조사결과의 분석결과에 터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별로 우선 순위를 두고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개혁과 학교중심 활동의 탈피, 사회 환경의 개선, 청소년육성 분야에 있어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개선,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교류진흥 등의 5과제를 제시하였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새롭게 조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삶의 변화가 과연 현재와 강한 연속선상에 있느냐, 아니면 단절적인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는냐 하는 등의 변화속성에 대한 파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정책수립의 과제는 그 자체가 현재 보다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이나 능력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정책적 관심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등 청소년 유관단체나 관련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참조: 정원식, 1987; 정범모, 1988, 1991; 이상주, 1988; 권이종, 1992; 어윤배, 1994).

이들의 주장은 표현의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대체로 미래사회의 특성을 고도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사회, 평준화와 다양화가 병행하는 사회, 국제화 사회로 규정하고, 나아가 청소년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서 민족적 정체성(내지는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자아의식, 창조적 사고력이나 대응능력의 배양 및 국제적인 인간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성과 육성 정책의 방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육성에 관심을 가진 지도자나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식화된 믿음으로 인식될 정도로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다소 단순화된 평면적인 주장 그 자체 보다는, 이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동의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적어도 다가올 변화된 미래사회에서는 근대사회의 형성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형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본질적 속성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로서 사회적 맥락(social paradigm)의 변화 관점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개방화·세계화를 수단으로 한 변혁의 과정과 현대적 상황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방화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문명의 초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면서 살아온 모습이다. 그러나 확장의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개방화의 의미가 전문성을 띄게 되어 경제, 제도, 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로서 국제화의 성격을 지니며, 개별국가가 세계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참조:엄정식, 1994:54-58).

따라서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계화’(참조:출처미상, 1995)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와 개방화로 표출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패러다임 변혁기의 일 국가적 대응전략인 동시에 구체적인 개혁정책의 실천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변화의 속성과 상황은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혁기였던 19세기 후반 개항기의 한국사회에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노력들과 비교되기도 한다(참조:이광호, 1994).

이렇게 볼 때, 현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의 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의 청소년육성 체제와 형태를 검토하고 개혁해야 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근대사회의 상식화되어 버린 논리로서 반복해온 바대로 단순히 시간의 변화선상에서 양적인 변화추면으로 인식되는 미래변화의 예측과 대응전략의 수립이라는 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청소년육성 체제의 조직원리와 이념을 하나의 근대사회의 역사적 생성물로 이해하고 개방화 시대와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조직원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현재 청소년육성의 중핵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 개방과 세계화의 전략이 우선 교육자체의 개혁으로 집약되고 있듯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또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 분야 역시 교육개혁과 대등한 수준의 개혁적 재구조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청소년육성 분야의 재구조화는 산업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온 현재의 청소년육성

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 청소년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전달행태와 구조 및 권력을 포함한 자원의 배분구조, 관련기구와 기관의 조직행태 등을 포함한 육성 체제의 맥락(유사계통적 패러다임)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동시에 학교교육을 비롯한 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사회교육 기관이나 기구들이 청소년 활동의 장들과 연계된 개방체제로 전환할 때, 청소년육성 분야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의 미래사회의 변화추세의 특징적 성격을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로 표현할 때 청소년육성 체제의 대안적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 대안적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행태, 관련기구들의 조직적 행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청소년육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확인한다. 아울러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의 전략은 문명사적 대전환기이며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견되어지는 미래사회의 특성과 개혁의 과제를 추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육성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안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청소년육성의 부문별 장기전략과 과제도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존의 중·장기 계획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의 청소년육성 관련 중·장기 계획들은 대개 목표 중심적인 행정적 집행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근대적 육성 체제의 역사적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세계화, 개방화라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청소년육성의 접근방향과 기본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청소년 관련전문가와 행정가들에게 미래구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 체제의 조직원리와 이념을 재구조화하고 부문

별 장기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기술하기 보다는 청소년육성 장기전략에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그 해결대안 모색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정책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제해결을 위한 기본여건과 조직원리의 점검과 전략의 제시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즉, 개방화를 수단으로 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의 기반구축과 방향설정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델파이조사 방법이다. 즉,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21세기의 사회 변화양태를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외 국가발전과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한 장기과제의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청소년 관련전문가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방향과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델파이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물음에 대한 주요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I-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과 절차

연구 내용	연구방법 및 절차
○ 연구계획 구체화	- 문헌분석 - 연구방향 설정 및 계획 구체화를 위한 연구자회의 및 전문가의견수렴
○ 21세기 사회 변화 양태 및 변화원칙, 전략 전망과 고찰	- 문헌분석 - 각 분야별 장기전략 보고서 분석 - 미래학자들의 저서 및 자료분석을 통한 미래사회의 전망과 원리 추출

○ 미래사회의 전망과 청소년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 관련전문가 및 행정가 의견조사 (제1차조사 35명, 제2차조사 117명)
○ 청소년육성 체제의 조직원리 및 이념의 역사적 분석	- 문헌분석 - 청소년 행정기관의 관련문헌 및 통계적 자료분석
○ 새로운 청소년육성의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문헌분석
○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제 설정 - 학교중심의 활동 탈피 - 사회 환경 개선 - 재정지원과 배분 구조 개선 - 청소년 복지의 증진 - 청소년 교류의 진흥	-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II. 미래사회의 특성

21세기의 문턱에선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라는 역사의 급류속에 처해있다. 급류의 중심부에서는 그 방향을 감지해 내기가 어렵듯이 미래의 구도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다가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되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파생된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에 숨겨진 미래의 모습을 찾아내어 전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확실히 이제는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이며, 동시에 세계사적 권력의 재편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현재의 변화양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하는 것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분석·종합하여 앞으로 닥쳐올 미래사회 변화의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의 특성들로부터 변화의 동인과 원리를 추출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변화에 대처할 방향감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향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1. 21세기 사회 변화의 성격

(1) 불확실성

미래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이나 특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규범을 추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일고 있는 변화의 현상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플러의 지적처럼 미래연구라는 것 자체가 예측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패

러독스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Toffler, 1995). 가속적인 시대적 변화 자체가 늘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는 수정을 필요로 하기에 미래연구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완전하나마 미래사회에 대한 개략적인 지도라도 가지고 있는 편이 미래를 대처하는 데 훨씬 유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2) 변화의 범위와 복잡성

미래사회의 변화내용은 매우 광범위할 것이며 변화의 양태는 복합적인 중층적 구조를 갖게될 것이다. 즉,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총체적인 구조적 변화의 양상이 서로 복합적인 관련 속에서 질적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문명창조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변화와 복잡성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사회적 제도·도구의 창출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기존의 양자택일, 냉전구도의 세계사적 질서의 와해로 인해 생겨난 가치의 다양화와 복잡성은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 인간적 가치의 지배,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3) 변화의 가속화와 연속성

현재 일고 있는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다른 점은 과거 문명사적 전환기의 변화속도 보다 단기간에 걸쳐 훨씬 급격하고 가속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변화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속도 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네이스비트에 의하면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은 1백년이 걸렸으나 산업화 사회로부터 다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겨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변화가 너무나 짧은 시일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미처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Naisbitt, 1983:25). 이렇듯 과거의 사회 변혁기보다 급격한 속도로 변화함으로써 변화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속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 미래학자들은 연속성의 구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백연구재단 편집실, 1991:199).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통치, 관리, 제도적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자식으로 은행과 거래하고, 더 많은 수의 사람과 교류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4) 문명사적 대변혁

21세기 미래사회로의 변화는 생활양식, 가치체계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은 마치 농업 사회로 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만큼 깊고 큰 구조변화라는 점에서 단순한 세기적 전환이 아닌 문명사적 대전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바라볼 때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창조적 주체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드러커는 “우리들의 시대는 전환의 시대이다.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 전환기의 도전들 즉, 탈자본주의 시대의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확실히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이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금은 행동을 할 때이다”라고 하였다(Drucker, 1993:41).

토플러는 “역사상 파워게임의 모든 규칙이 한꺼번에 변화하고 권력의 본질 자체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는 더욱 희귀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우리 인간을 크게 규정짓는 권력 그 자체가 지금 재규정되고 있다”고 하였다(Toffler, 1990:29). 한편 그는 “지금 현재는 산업사회의 제2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제3파 문명이 충돌하는 과도기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세대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나고, 어떤 시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난다. 두 문명의 중간에 있는 현재의 세대는 ‘새문명의 창조’가 운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Toffler, 1995).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질적, 총체적 대변혁의 특성을 가지며 세계질서 및 권력구도의 재편의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우리는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문명의

전환기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방향과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인식의 전환과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 21세기 사회 변화의 동인과 변화의 원리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를 시대구분하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과 시각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역사적 시기구분에 근거하여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과 원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변화의 동인

인류역사는 전기 산업사회·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은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¹⁾ 미래학자들은 대부분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를 시기구분할 때 크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라는 세 단계로 구분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다니엘 벨은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사회를 전기 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로 나누고 있다. 드러커는 전기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또는 지식사회로 나누고 있고, 토플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나누고 각각을 제1물결 사회, 제2물결 사회, 제3물결 사회로 보고 있다. 네이스비트도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각 학자마다 시기별 명칭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인식을 혹은 이해의 범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 변화의 전체적인 구도를 조망해 보면,

1) 전기 산업사회 대신에 농경사회 또는 농업사회라는 용어로 달리 표현하기도 하고, 산업사회를 공업사회 또는 자본주의사회라는 용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후기 산업사회 대신에 후기 자본주의 사회, 탈공업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등의 용어를 대신 쓸 수 있다. 이들 용어는 각 사회 단계의 특성에 준하여 학자들이 나름대로 붙인 용어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용어가 같은 범주안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문명사적 전환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진퇴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하였듯이,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후 10-20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변화의 과정은 역사의 진보와 후퇴의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역사적 진퇴의 과정에서 전기 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의 시간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 벨에 의하면 전기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의 지향점이 과거를 향해 있었고, 임기응변적 반응이 통하는 시대였던 반면, 산업사회에서는 임기응변적 적응과 투영이 주된 특성으로 나타난 시대였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의 지향이 미래를 향해있고 예비와 계획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Bell, 1994:226). 네이스비트도 역시 농업사회에서 시간적 지향성은 과거를 향해 있었고, 산업화사회는 현재를 향했고, 정보화사회는 미래를 향해 있다고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재로부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Naisbitt, 1983:26).

한편 미래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사회 변화의 동인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질적 대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과학의 발전에 따른 산업혁명의 결과이며,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도 역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혁명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는 가정생활, 노동과 여가생활에 걸친 모든 측면에서 대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스비트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원동력으로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변화의 속도는 통신기술이 정보 플로우트를 단축함으로써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았다. 정보 플로우트의 단축에 따른 폭증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정보선택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정보를 공급받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Naisbitt, 1983:31-36).

앨빈 토플러도 역시 과거처럼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는 통신기술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으며, 현재 정보를 통해 재화, 서비스 등을 이동

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이라 파악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는 물론 기업, 개인의 생활방식과 의미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공성진, 1991:279).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경제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는데 과거에 토지·노동·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이제는 더이상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고 본다. 즉, 토지·노동·자본이 생산자원이라는 과거의 기본적인 경제원리는 이제 구식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식·정보가 오늘날 탈바꿈하는 세계경제와 생활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토플러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은 군사력이었던 것에 비해 산업사회에서는 경제력으로 그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였고, 지식사회가 되면 정보·지식·기술력 등이 권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권력의 격변을 야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 체제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즉, 데이터, 아이디어, 상징체계의 즉시적인 전달과 보급에 의존하는 새로운 체제가 낡은 공장굴뚝 체제와 충돌하면서 권력의 원천이 폭력, 부, 지식의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Toffler, 1995). 따라서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며 그 궁극적인 수단으로서 지식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이다. 즉, 그는 새로운 지식경제가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새로운 세력이 출현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권력관계를 크게 혼란시키게 되어 이러한 권력투쟁은 앞으로 더욱 더 지식의 배분과 그 접근기회를 둘러싼 투쟁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식의 장악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내일의 전 세계적 권력투쟁에서 핵심문제라고 했다(Toffler, 1990:32-45).

다니엘 벨은 복잡성의 관리에 있어서 지적기술들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인력자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전기 산업사회는 천연자원을 생산수단으로 하여 자연을 극복하는 게임의 형태였고,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를 자원으로 제조된 자연을 극복하는 게임이었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정보를 자원으로 하여 인간들 사이의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체제로 파악하고 있다(김상현, 1994:57). 그리고 그는 농경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원리는 전통주의로서 토지·자원의 제약을 받았고,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투자결정에 대한 국가적이거나 사적인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론적 지식의 중심성이 기본원리로 작동하며 코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Bell, 1994:226).

네이스비트도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지식가치설을 주장하였다. 산업사회의 전략적인 자원은 자본이고, 정보화 사회의 전략적 자산은 정보이다. 따라서 자본집약형의 경제구조가 두뇌집약형의 경제구조로 전환한다고 보고, 정보를 활용하면 경제 시스템에의 접근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앞으로 대량생산된 지식이 경제를 추진하는 힘이 된다고 한다(Naisbitt, 1983:21-24). 이에 따라 지식 자체가 21세기의 주요한 산업이 되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중심적인 생산자원을 공급하는 산업이 된다는 것이다.

드러커도 지식이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대두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는 “자본이나 천연자원(토지) 또는 노동은 이제 더이상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생산수단)이 아니다. 새로운 생산수단은 지식이며 앞으로도 또한 지식일 것이다. 부를 창조하는 중심적 활동은 생산적인 곳에 자본을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는 이제 생산성과 혁신에 의해 창조되는데 생산성과 혁신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한 결과이다(Drucker, 1993:29)”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식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의미 변화의 세가지 국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산업혁명, 생산성혁명, 경영혁명으로 표현된다(Drucker, 1993:46). 첫번째 국면인 100년 동안(1750-1850) 지식은 작업도구와 제조공정 그리고 제품에 적용되었다. 이것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본다. 1880년경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최고 절정기에 이룬 두번째 국면에서 새로운 의미의 지식은 작업 그 자체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생산성혁명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된 마지막 국면은 지식이 지식 그 자체에 적용되어지는 경영혁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식이 경제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와 지식의 성격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향후 사회에 대해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근본적인 전환이 이미 일어났고, 새로운 사회는 비사회주의 사회이고 또한 탈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생산자원인 정보의 성격상 소유형태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적·유형적 소유에서 무형적·지적 소유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는 수

평적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정보는 이해하고 조직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지니며 지식·힘 또는 권력으로 작용하는 자원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자원성이 정보를 상품으로 바꾸게 하는 잠재성을 갖기 때문이다.

토플러에 의하면 제1의 물결인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물질적·유형적 소유 형태였고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에서는 건물·공장·자본 등의 생산수단이 기본적인 소유형태였다. 그러나 제3의 물결에서는 이런 유형적·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정보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소유형태가 된다. 이것은 제2의 물결시대에서처럼 배타적으로 소유되고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공성진, 1991:279-282).

이렇듯 배타적 성격을 갖지 않는 정보의 성격으로 인해 드러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라도 무서운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돈과 정보가 범국제화 되자 가장 작은 단위의 국가마저도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모든 나라가 똑같이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돈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Drucker, 1993:231).

한편 토플러에 의하면 지식은 참이건 개략적이건 또는 거짓이건 상관없이 태도, 가치관 등 사회적 상징물은 물론이고 정보, 데이터, 상징 및 표상을 포함 또는 포괄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리고 지식은 폭넓은 융통성을 지니며 과거 물리력, 부(자본)가 유한한 성격을 지니고 한쪽이 많이 가지면 다른 한쪽은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로섬 소유관계였던 것이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의 성격이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쌍방 모두가 동일한 지식을 서로를 위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에 물리력, 부는 강자와 부자의 소유물이었던 반면 지식은 약자,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지식이 갖는 혁명적 특징이며 결국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권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Toffler, 1990:43).

이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 따른 정보화는 정보의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분배 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편, 1994:800-803) 이러한 정보화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의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온다. 즉,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권력과 부의 원천이 되고, 천연자원이나 자본, 노동력 보다는 정보·지식의 양과 질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현격하게 다른 새로운 부의 창출 체제가 형성되게 된다. 지식·정보가 새로운 부 창출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각국은 지적 자산의 개발과 확보를 둘러싸고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의 성격을 띤 정보전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학자들의 역사 발전단계에 따른 각 시기별 특성을 정리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미래학자들의 역사 인식틀

농경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변화의 동인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혁명 (교통수단 발달)	정보혁명 (통신기술 발달)
자 원	천연자원	에너지	정보
설 계	자연을 극복하는 게임	제조된 자연을 극복하는 게임	인간들 사이의 게임
생산양식	방목, 우축	제작, 구성, 조립	조립
기술중학	노동 집약	자본 집약 자원, 노동, 전문, 공장, 자본	지식 집약 정보, 지식
생산수단	토지, 노동	물질적·유형적 소유형태 (배타적 소유)	무질적·유형적 X (개방적·공유하는 소유)
직업구조	제1부분 천연자원 개발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제2부분 재화생산, 대규책처, 프로세싱	제3부분 교통, 공공사업(수도, 전기, 가스 등) 제4부분: 무역, 금융, 보험, 부동산관리 제5부분: 의료, 교육, 리서치, 정부, 해저
중심작업	농부, 광부, 어부, 미숙련 노동자	문숙원노동자, 엔지니어	전문 기술 과학자
시간퍼스펙티브	과거경향, 임기응변적 반응	임기응변적 적응, 투영	미래경향: 예비와 계획
기존원리	전통주의: 토지, 자원의 제약	경제성장: 두자건정에 대한 국가적이거나 사적인 통제	이론적 지식의 중심성과 코도화
변화의 원리		* 공장의 원리 * 대량생산의 원리 - 생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노동력 분업화) 개인의 - 단순노동에 의해 성취 -양적·기계적 복잡성 -표준화 - 합리성 -규격화 - 결과의 효율성 -극대화 - 기계화 -집중화 - 조직성	* 서비스·정보 산업 중심 * 시간, 지식, 정보가 '관련적' 요소 (계속적 혁신능력, 고차 - 동업자들과 인간적 신뢰 - 관계형성능력: 공동관계) -다양화 - 행위자의 만족성 -상황성 - 인간화 -왕의성 - 조직의 인간화 -분산성 - 개별화, 개성존중

		-관료화 -확일화 -거대화 -대중화	-자율성 -단대중화 -소규모화 -주체성
사회적 행동원리	완벽함과 철저한 정여 적당히, 대중, 비슷하게, 대강이 봉하는 시대 초단위 시간관리가 필요없음	정밀, 정확, 규정준수 예외인정 양함 규칙준수, 책임, 위신, 원칙대로 수행	단순한 규칙, 규정준수 탈피 새롭고 독창적 사고 요구 발상의 전환- 사고하는 방법을 사고
권력	문리력	경제력	정보/지식/기술력
조직원리		피라미드형 조직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	네트워크형 조직 <정보·지식 중심의 산업구조>
정치체제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간접민주정치)	참여민주주의 정치체제 (만인에 의한 정치/직접민주정치 가능)
국가의 형태		주권 국민국가	법국제주의, 지역주의, 종족주의
국내정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정당의 소규모화, 분산 *제3파정치:다양화, 단대중화 (의사결정권 분산, 다양성, 자율, 이견존중)
국제관계		악위, 수당, 분쟁 재 국 주 의 공산주의<->자본주의 남<->북	상호의존·협력의 관계 국제화사회 발전의 고속국가<-> 저속국가
리더쉽의 형태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조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복잡한 조직내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경제체제		저대기업 조직성, 효율성, 대량생산	글로벌 경제체제 경제단위 소규모화 유연성, 전문성, 적응성

<표 II-1>에서 제시되었듯이 앞으로 도래할 정보화 사회에 대해 미래학자들은 정보통신 기술혁명을 핵심적인 동인으로 보고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구조적 대변혁을 예견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따라 정치체제, 사회구조, 가치체계에 일대 대변혁을 가져오리라고 보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보통신 기술혁명이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게 될 영향은 심대하고 광범위한 것이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주요한 자원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 지식·정보의 흐름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생산요소들이 가진 성격과 달리 정보가 가진 무한성, 시공을 초월하는 성격, 개방적·공유적 성격 등은 정보에로의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보화 사회

에서의 수평적 관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한편, 지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한 문명의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문명의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므로 산업문명과 새로운 문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 또한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에 대응하여 유연성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변화의 원리: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인류역사의 발전단계에서 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화 사회로 구분할 때 각 사회의 단계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운영원리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는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그 사회의 운영원리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문명에 적합한 원리로 대체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원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규범이나 규칙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 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정보화 사회를 향한 변화의 범위나 속도가 단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급격하며 깊고 큰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다. 현재 일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 속에서 그 원리와 방향성을 추출해 볼 때,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대비되는 변화원리를 여섯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전문화에서 탈전문화로, 동시화에서 탈동시화로, 집중화에서 분산화로, 극대화에서 소규모화로, 중앙집권화에서 분권화로의 변화이다.

1) 표준화에서 다양화로의 변화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운영원리 중의 하나는 표준화의 원리이다. 산업사회는 공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같은 대량성·대중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최소투입의 최대산출이라는 경제성의 원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모든 생산공정, 관리부문, 업무절차, 기계, 제품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화의

원리는 산업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능률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심지어 고용절차와 학교교육 체제에도 표준화의 원리가 적용되어 표준화된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교육은 직업시장의 준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표준화된 교육편제·입학절차·자격인정제도·지능테스트와 같은 방법들이 널리 이용되었다(Toffler, 1989:68-71).

그런데, 산업사회에 지배적이었던 표준화의 원리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원리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된다. 즉, 대량생산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현상으로 부터 탈대량성·탈대중성의 특성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으로 변화되고 소비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전략으로 전환된다.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었던 형태에서 이제는 생산소비자라는 복합적인 형태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욕구가 고도로 개성화되고 생활양식이 다양화됨으로써 표준화의 원리가 대체되어 간다.

2) 전문화에서 탈전문화로의 변화

산업사회는 전문화의 원리가 적용된 사회였다.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업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일을 하는 전문가와 한가지 일만 되풀이하는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산업화의 물결이 진전함에 따라 지식 보유자와 그 고객 사이에 시장이 개입하여 그들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뚜렷하게 갈라놓았고 분업을 더욱 더 세분화 하였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전문화와 전문 직업주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중립적인 지성의 확고한 원천으로 간주되던 전문가가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Toffler, 1989:324).

탈전문화의 현상은 미래사회를 뒷받침해 주는 주된 원리로 기능하는데, 산업사회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권위와 권한의 특권적 부여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로 인해 그 권한이 실추되고 전문가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주체적 수준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산업사회의 공교육제도와 교육의 대리인인 전문가들에게 자식들의 교육을 위탁했던 것을 가정 내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육이 기존의 교수 중심, 공급자 중심의 체제에서 가정중심,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된다. 이에 따라 주체적 선택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자율적 통제 등이 요구되게 된다.

3) 동시화에서 탈동시화로의 변화

생산과 소비의 균열의 확대는 산업사회 인간들의 시간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에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시간은 곧 돈으로 간주된다. 산업화의 물결이 기계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작업의 동시화는 유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산업사회는 기계의 고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로 모든 작업은 시간으로 계산되는 일련의 연속작업으로 세분되었다. 따라서 농업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엄수가 산업사회에서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여가시간까지 시간에 쫓기고 기계의 요구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일단 산업사회의 동시화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면 일상생활까지도 산업사회의 시간체계 속에 갇히게 되었다.

즉, 농업사회에서는 완벽함과 철저함이 결여되고, 적당히, 대충대충이 허용되고, 비슷하게, 대강대강이 통하는 시대였으므로 초단위의 엄격한 시간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정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규정대로 따르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과 최선을 요구하고, 원칙대로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면서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시간관념이 도입된다. 산업사회가 생활을 기계의 템포에 맞게 결박한 것이었다면 정보화 사회는 기계적 동시화에 도전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리듬을 바꾸어 농움으로써 우리를 기계로부터 해방시킨다. 자유근무시간제, 교대근무시간제, 파트 타임 노동의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사회를 지배해왔던 동시화의 물결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새로운 시간패턴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리듬, 예술, 생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현대인들은 대중화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나 소비하는 생산품에 의해 달라지면 달라질 수록 더욱 더 개체로서 대우받기를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강요된 스케줄에 더욱 더 저항하게 된다. 한편,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보편화되었거나 대중화된 스케줄을 개별화된 스케줄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을 지키라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 시간업수는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상황적인 것이 되었다. 결국 낡은 산업화 시대의 행동양식에 도전하면서 밀려온 정보화의 물결은 전체 문명과 시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자발성과 생활의 기쁨을 파괴하고 산업사회를 상징했던 낡은 기계적 동시화는 사라져 가고 있다(Toffler, 1989:303-314).

4) 집중화에서 분산화로의 변화

산업사회의 집중화원리는 에너지·인구·작업·교육·경제 조직 등 모든 분야에 깊숙히 침투하였다. 농업사회는 널리 분산된 에너지원에 의존했던 반면에 산업사회는 고도로 집중화된 화석연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구도 집중시켜 농촌인구를 대도시로 이동시키고, 작업, 산업, 생산까지도 집중화시켰고, 이러한 집중화의 원리가 능률적이라 생각했다. 대규모의 산업화의 실현에는 한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하면 할수록 단위당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이 원리 아래에서는 모두 같은 장소 즉 설비가 집중된 공장이 필요했다.

산업화 사회의 기계 설계에는 노동력, 원료, 자본, 공장의 거대한 집중화가 필요했으나 정보화 사회는 분화된 사회로 결과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분화의 물결이 산업화의 집중화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Naisbitt, 1983:120-121). 자본·에너지·자원·사람 등의 집중화를 장려했던 산업문명이 오늘날에는 분산화로 대체되고 있다. 인구의 지리적 분산이 증대되고, 에너지의 경우는 화석연료의 밀집된 매장량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보다 광범하게 산재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옮겨가고 있으며 학교·병원·연구기관 등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수많은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5) 극대화에서 소규모화로의 변화

산업사회에서는 극대화의 취향을 조장했다. 규모의 확대는 경제성을 높여 주었고 그 결과 큰 것은 곧 능률을 의미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정부·기업 등 조직체들은 미친듯이 성장의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같은 극대화원리는

산업사회의 정신상태에 너무나도 깊이 침투해 있어 아무 것도 더이상 합리적 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문명의 강박관념적인 극대화지향도 세찬 공격을 받고 있다. 산업사회의 거대규모·극대화의 추구 현상에서 소규모화로의 현상이 사회 여러 부문에서 일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운동, 가족단위의 가정 중심의 교육, 기업의 소규모화 현상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도처에서 아주 자만에 찬 규모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 많은 조직체들이 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그들의 작업단위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이 경영의 규모를 아주 축소시키고 있다(Toffler, 1989:322-323). 대기업체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기업을 일으키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서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규기업의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헌은 다시 평가받게 되었다(Naisbitt, 1983:145-147). 이에 따라 극대화의 원리는 사라져 가고 있으며 그 대신에 소규모화의 원리가 효율성을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6) 중앙집권화에서 분권화로의 변화

모든 산업국가들은 중앙집권화를 매우 정교한 수법으로 발전시켰다. 각 지방이 대체로 자급자족하는 기본적으로 탈중앙집권적인 농업사회 경제가 산업사회의 종합적인 국민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연 새로운 권력의 중앙집권화 방법이 나타났다. 이러한 권력의 중앙집권화 방법은 개별기업과 산업, 그리고 전체 경제의 차원에서 구현되었다.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중앙집권화의 원리는 정보화 사회에는 새로운 정당, 경영기법, 조직체제, 경제전반에 걸쳐 분권화의 원리로 대체된다. 정보화사회는 분권화된 사회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보경제의 부상은 중앙집권화를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산업사회의 쇠퇴를 가져오게 하였다. 토플러는 정치, 기업이나 정부조직, 경제 그 자체에 있어서의 모든 반중앙집권주의적 경향(매체·컴퓨터 위력의 확산, 에너지체계 등 많은 분야의 동시적 발달에 의해 강화되었다)은 전혀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 내고 있으며 또한 어제의 규칙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Toffler, 1989:321-322).

네이스비트는 분권화야말로 자연스런 상태이며 중앙집권화는 지난날의 산업화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Naisbitt, 1983:119-122). 그는 이러한 분권화의 물결이 사회해체가 아닌 균형잡힌 다양한 사회를 다시 구축하여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분권화는 정치, 기업, 문화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그 변화의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실체로 부상하고 있는 점, 기업분야의 경우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본사도 이제는 지방 지사를 엄중한 통제 밑에 둘 수 없게 된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문화면에서 분권화의 특징은 유사성 대신 상이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획일적인 건축물 대신 매우 개성적인 지방 특유의 건물이 두드러지게 세워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3.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21세기의 사회상

미래사회는 다양화, 탈전문화, 탈동시화, 분권화, 소규모화, 분산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전개될 것인지 미래사회 변화의 양태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분류해 보면 정보화 사회, 첨단기술 사회, 네트워크형 수평사회, 세계화 사회, 다원화사회 등의 사회양태로 나뉘 볼 수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의 특성을 분석해 놓은 것을 참고로 제시하면 <표Ⅱ-2>와 같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정보화 사회, 첨단기술 사회,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 세계화 사회, 다원화 사회라는 5가지의 임의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절에서는 각각의 사회 형태별 특성을 차례로 고찰해보고 미래사회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표 II-2> 미래학자들의 미래사회 전망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응방법과 전략
<1> Naisbitt, J. *매가트렌드(1982) *매가트렌드 2000(1990) *글로벌 패러독스(1994)	① 산업사회-> 정보사회 - 지식가치설 - 정보화사회 -GNP의 약 반은 '정보'가 차지하는 시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가져오는 '정보선택'의 시대 ② 강요된 기술-> 첨단기술(하이테크/하이터치) -'로봇'과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격변하는 노동환경 -제2단계에 돌입한 마이컴혁명 -제3단계의 21세기 자동화물결 -모든 일의 75%를 로봇에게 빼앗기는 시대 ③ 국가경제체제-> 세계경제체제 -지구적으로 생각과 지역적으로 생각 -과거의 영광의 미련과 미국경제 ④ 단기경제-> 장기경제 -10년앞을 내다보기 시작한 산업계 ⑤ 중앙집권체제(집중)-> 지방분권체제(분산) -분산화의 물결이 사회를 변질시킨다. ⑥ 제도적 복지(援助)사회->自助사회 -타락의존으로부터 자력의지로 ⑦ 대의 민주정치체제-> 참여 민주제 -전원이 참여하는 자주적 민주주의 ⑧ 피라미드형 위계질서체제-> 네트워크 체제 -피라밋 기구로는 이미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⑨ 北의 시대-> 南의 시대 -경제 에너지의 지역적 대이동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남부와의 이동 ⑩ 양자택일 사회-> 다원선택 사회 -양자택일로는 이미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 글로벌패러독스: 보편주의·세계주의 대 지역주의·부족주의의 역설적인 조화 "지역적(무족적)으로 사고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라"	-'응급반응' 수동적 자세에서 '선택하는' 적극적 자세로 -'인간성 상실' 어디까지 지지될 수 있는가? -컴퓨터시대에 살아남는 지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공존 -기술화의 반동이 인간성회복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서기 2000년에는 제3세계국가들이 세계상품의 3분의 1을 생산한다. -'성장산업'과 '하향산업'이 만드는 이중구조 -단기적 전망으로부터 장기적 전망으로 -분산화의 평연성 -되살아나는 소기업정신 -개인레벨의 자조로부터 사회레벨의 자조로 -의학, 교육, 방법, 식량면에서의 자조운동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근로자 경영참여 -네트워크형의 수평 사회가 뿌리를 내린다 -인간미가 풍부한 의사소통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신화를 붕괴시킨 근로 여성들 -환경받기 시작한 인종의 다양성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응방법과 전략
[2] Drucker, P. *난기류시대의 경영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미래기업	- 변화에 적응하는 경영 -2000년의 성인인구 -노동력구성의 다양화 -진통적 노동가치관의 변화 -응성심과 사명감의 대상은 자기자신 -비스마르크 '정년 제도'의 새로운 시각 -점점 심각해지는 젊은 노동인력부족 -각 지역의 노동 동태	* 가장 불안정한 변동요인, 과관요인-인구 동태, 인구구조의 변화(선진국의 노동력 부족) 노동가치관의 변화 사회: 자본주의->지식사회 정치: 후진국민국가 ->거대국가/ 범국제주의, 지역주의, 종족주의 지식: 지식경제학/ 학교의 책임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3] Jacobs, F. *21세기 사회제도의 유용성	-사회제도의 유용성 -다이나믹과 유용성 -리트메이닝 -성인의 발달단계	사회제도의 유용성 대학의 역할 증대 ① 안식처 ② 성공약속장소 ③ 생계교육 ④ 직업상 재훈련	21세기 사회의 유용성 강조 -고용의 유연성 -21세기에는 사회에 유용성을 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유연성있는 교육제도<->사회: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함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4] Friedan, B *21세기 의식구조 변화	-의식의 변화 -현대는 쪼면속적인 삶이 받아들여지는 시대 -가치관의 변화 -21세기에는 쾌적함을 추구하는 사회 -쾌의 경제 -쾌를 추구하는 행동과 시장 -21세기 쾌를 추구하는 행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의식의 변화 다양성 허용/ 여성적인 것의 가치 인정되는 시대 행복에 대한 가치관: 생기있고 만족도 높은 생활 * 21세기에는 쾌적함을 추구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 노인 신체장애자도 함께 누리는 쾌적한 사회추구 -이기성과 이타성이 공존하는 성숙사회의 소개 시간적여유: 경제적·경신적 여유 -> “자기실현욕구”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5] Bell, D. *21세기 탈공업화시대의 인간상	-탈공업화사회의 인간상 -노동시간의 단축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은 탈공업화시대의 상징이다. -정보화 자동화시대에 예상되는 실업문제 -노인문제와 삶의 의미 -“창조”는 만족감을 찾는 행위이다.	노동시간단축/수명연장 인간 대 인간의 대견, 책임중요시되는 사회 경제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21세기는 창조/독창성/개성이 평가받는 시대	노동에대한 가치관/라이프스타인의 변화 -사람은 멀리하고 기계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시대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6] Pool, I. *21세기 뉴미디어의 다양화	-TV와 무관심 -가족의 끈과 TV의 역할 -TV가 가져다주는 욕구불만 TV: 수동적, 좁은 선택폭, 평준화, 무개성, 일방통행적 성격, 폭력물, 상업주의 ->진저하	-> 미디어의 발달(기술진보)->	-뉴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 -케이블 TV시대의 주객전도 현상 케이블TV: 21세기의 기대되는 시스템, 지역공동사회형상을 위해 유용/ 시청자에게 만족감 제공 -뉴미디어의 새로운 사명 비디오/다채널/멀티미디어 적극적, 각자의 흥미나 주의력에 연관, 개성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7) Riesman, D. *21세기 평등주의와 문화 수준	-고독한 군중 남녀공학제도/ -평등주의는 문화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이퍼텍티브액션(평등법) -남녀평등과 자연의 역행	공학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수한 여성의 배치는 어렵다. -문화수준, 학생수준, 교수수준 저하	*엘리트질 대학의 목표: 취직이 아니라 자기 개발(기능/특기)을 위한것이어야 함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8] Thurow, L.C. *21세기 제로섬 사회의 파란 요인	-제로섬 사회 -에스인가 노- 인가	생산성저하(경제 저성장)-제로섬게임 제로섬게임사회=불만족한 사회	21세기 배분역학의 중요성, 행복 추구론에 대한 강조 -> 욕망억제방법 습득/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함 *21세기는 정신적추구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9) Kennedy, P. *21세기준비	* 21세기를 앞두고 인류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시련은 「인구의 힘」이 분출시킨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술의 힘」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하는 문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21세기의 과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재촉하는 두 요인 ①인구폭발 ②지식폭발	‘교육’을 통한 노력 ① 교육의 수월성 증대 ② 근로인구의 재교육과 실직전직을 대비한 직업재훈련시스템 ③ 세계인으로서의 자결(공정감, 균형감)을 육성하는 역할은 교육이 담당 ④ 여성교육 요구

	변화의 내용	변화의 요인과 원칙	적용방법과 전략
(10) Toffler, A. * 미래쇼크(1970) * 제3물결(1980) * 권력이동(1990)	-역사의 가속화,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 -정보통신산업의 부상 -Prosumer생산소비자(생산소비자의 새로운 융합) -미디어의 탈대중화 -권력의 본질 자체의 변화와 지식의 역할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사회; 공장의 원리- 집중화, 표준화 지식사회; 다양화, 탈대중화, 분산화 권력이동; 물리력-> 힘 -> 지식	-유전자혁명 -교육혁명 -융통성있는생산 -특정분야를 목표로 한 시장 -파트타임제 노동의 확산 -네트워크 권력 -정보전쟁, 정보전술 -파괴적 미디어 -이미지 메이커 -파괴적 미디어

(1) 정보화 사회

1) 지식산업의 등장

정보화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 사회는 지식·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다. 산업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된 개인의 단순노동에 의해 성취

되는 “대량생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임에 반해 탈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이 가장 큰 구성요소가 되어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에 종사하는 지식산업이 부흥할 것이다.

다니엘 벨에 의하면 후기 산업사회는 경제 부분에서 3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사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서비스는 생산의 보조적인 필요나 정보산업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팽창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Bell, 1994:226).

그는 후기 산업사회에는 장거리 통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골격이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시행되는 방식과 지식이 창조되고 회수되는 방식, 그리고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과 직업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본다. 첫째, 전기통신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상품생산 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 전환시킨다. 둘째, 이론적 지식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세째, 사회관리의 주요 도구로서 지적 기술이 부상된다. 이에 따라 지식, 지혜, 경험, 직감적 판단은 형식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된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기술·경제 분야의 변화가 정치체제나 문화를 결정하지 않는다. 문화, 정치질서가 기술적 선택을 지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제한한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조립, 생산,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이동되며, 실험적·경험적 지식과 기술·정보가 이론적 지식으로 전환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계급과 지식, 정보 종사자 출현, 새로운 갈등 생성으로 지적 소유권이 중요시되고, 기술 자체의 개념이 확대되어 제도적, 지적 기술의 발명을 포함하게 된다.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급속하게 수입이 상승하는 직업과 간호사, 경찰관, 교사와 같이 기술주도적이며 생산성 향상에 비탄력적인 직업사이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부상할 것이다. 노동문제는 임금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변화를 꺼리는 문화와 관료체제의 저항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의 교육은 그 자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공성진, 1991:164-173).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천연자원 개발이 작업의 중심이었던 것이 산업사회에는 재화생산, 매뉴팩처, 프로세싱이 작업의 중심이 되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통, 공공사업, 무역, 금융, 부동산관리, 의료, 교육, 리서치, 정부, 레저등이 작업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중심작업이 농경사회에서는 농부, 광부, 어부, 미숙련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산업사회에

서는 준숙련 노동자, 엔지니어 등이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 기술 과학자가 직업구조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Bell, 1994:226).

이에 따라 지식인 노동자가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생산수단인 정보·지식과 노동자가 분리될 수 없는 형태이므로 과거에 있었던 노동자의 소외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관계도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간의 적대적인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식산업 관련노동자들의 평등한 인간관계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의 생산관계가 영주와 농노와의 대립관계였고,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관계였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소멸되고 지식인과 서비스 종사자라는 계층으로 분화될 것이며 이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 협력관계로 변화할 것이라 본다.

드러커도 지식사회의 중요한 집단은 지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지식사회의 주도적 사회집단은 지식 근로자가 된다. 생산성있는 곳에 지식을 배분할 줄 아는 지식 경영자 즉, 지식 전문가, 지식 피고용자들이 지식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은 조직들에 의해 고용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의 피고용자들과는 달리 생산수단과 생산도구를 함께 가지고 있다(Drucker, 1993:29).

네이스비트와 애버던은 고학력의 숙련된 정보 노동자들이 최고의 임금을 받을 것이며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고, 정보화 경제가 진전할 수록 직업은 더 좋아지고 보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중산층은 상부계층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빈곤계층을 사회의 주된 흐름에 합류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하였다(Naisbitt & Aburdene, 1990:44-52).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고자하는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 지식, 정보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는 계속적인 혁신능력을 필요로 하며 고객·동업자들과 인간적 신뢰관계 형성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공생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배규한, 1990).

2) 평생학습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 공교육제도가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듯이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현재의 과정에서 교육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는 후기 산업사회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그런데 근대 사회적인 교육적 사고의 틀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자체도 근대사회에서 핵심이 된 계몽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있는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인쇄술의 발전에 따른 문자의 보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인쇄매체를 통한 대량의 정보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 공교육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 민족국가의 확립이라는 비전아래 민족의 식과 근대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발전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보화의 진전이란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성격을 가졌으나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는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성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많은 종류의 정보가 폭증하게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속성에 의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정보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정보의 생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개인에게 평생에 걸쳐 요구된다. 그러므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자기교육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방적 교육체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가속화와 폭증 현상에 따라 적합한 지식을 가공·처리·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정보가 곧 부의 원천이 되므로 정보의 신속한 습득·처리·이용능력이 요구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가변성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체제가 요구된다. 미래학자들은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현행 교육체계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보화 사회는 그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능력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비록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훈련, 세계적인 안목 등이 요구된다고 믿고 있다(한백연구재단 편집실, 1991:200).

케네디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교육의 수월성 증대 둘째, 근로인구의 재교육과 실직·전직을 대비한 직업 재훈련 시스템 셋째,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인 공정감, 균형감을 육성하는 역할 넷째, 여성교육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Kennedy, 1993).

리스만은 남녀공학이 미국교육을 낙후시켰고, 평등주의는 문화의 수준을 낮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문적 전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21세기 교육의 주안점은 ‘과학 속에서 시’를 ‘숫자 속에서 미와 우아함’을 느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목표는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iesman, 김상현, 1994:163-177).

제이콥스는 미래사회에서 사회제도가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앞으로 개인적 만족을 위한 생계교육의 역할, 직업에 직접 연결되는 직업상의 재훈련 교육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Jacobs, 김상현, 1994:71-89). 그는 21세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교육제도가 생활주기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희망직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생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교육의 잇점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직업 또는 생활을 멈추게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는 안식처인 동시에 직업상의 재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드러커는 기술혁명이 교육을 뒤바꾸어 놓고 있으며 수십년 내에 우리가 배우는 방식, 가르치는 방식마저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육에서 신기술을 흡수하는 것은 국가적·문화적 성공과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사회개혁이나 사회개선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배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고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는 ‘과정지식’ 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한편 그는 학교가 점차 사회 속의 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았다. 학교가 평생교육에 맞추어

조직되어야 하므로 개방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탈자본주의 사회는 무작위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학습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부터의 관건은 지식이라고 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지식집약 시대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식과 지식 소유인은 책임을 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지식의 총체가 늘어감에 따라 교육은 지식전달이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학습의 초점은 학교에서 직장 고용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Drucker, 1992:285-393).

네이스비트는 사회제도나 기구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로 자조적인 움직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설명하면서 교육면에서도 자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교육면에서의 자조운동은 공립학교의 제도에 의문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부모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립학교의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사립학교 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감으로 인한 자조운동이 의무교육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육 자조운동으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Naisbitt, 1983:145-162). 토플러도 병원과 그밖의 많은 기관들에서 의사결정 기구에 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가의 권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교육을 직업적인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Toffler, 1989:324).

한편, 드러커도 또한 지식이 탈자본주의 사회의 자원이 되면서 지식의 공급자점 분배기관으로서 학교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독점적 위치가 모두 도전받고 있다고 보면서 학교는 최저 성과기준을 설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학교교육은 점점 더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학교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학교와 같은 공식적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사이의 동반자관계 요구, 학교와 기타 조직들이 상호협조 아래 여러 형태의 동반자관계, 제휴관계, 실습관계 등을 형성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Drucker, 1994:303-404).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육은 기존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요구되었던 집단성, 동시성, 표준성, 확실성, 권위적 풍토 등을 개선하고, 보다 새로운 형태의 질적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보화 사회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은 평생교육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재교육, 생애교육, 자기 만족을 제공하는 개방적 형태, 여타 사회기관들과 제휴관계·동반자관계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또한 중시된다. 한편, 미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인간, 창의력, 논리적 사고를 가진 인간, 적극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첨단기술 사회

1) 뉴미디어의 다양화

첨단기술 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풍요의 기반이 제공되는 사회이다. 뉴미디어에 의해 창출되는 정보화는 쌍방향성, 시·공간적 제약으로 부터의 해방, 개별화, 네트워크화, 정보의 폭증, 가상현실 세계의 창출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보습득에 있어서 능동적·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게 되며, 정보습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공간적 제약이 극복된다. 그리고 개인적 관심에 의해 개성화·개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한편 정보처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가상공간을 통한 간접체험의 기회가 증대되고 연령·성별·인종·계층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시에 정보접촉에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한국정보문화 센터, 1994:88).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 세계적 정보교환 체제의 형성,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다중선택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시엘 폴에 의하면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출현과 뉴미디어에 의한 정보화의 진전은 생활 및 문화의 영역을 확대시켜 다양한 선택이 가능케 해준다고 하였다. 즉, 20세기에 가졌던 미디어의 '대량성, 일방향성, 평준화, 무개성의 성격은 미디어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각자의 흥미나 요구에 부응하는 넓은 선택의 폭, 쌍방향적인 소통의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20세기 TV가 가졌던 부정적인 측면은 케이블TV,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보완되어질 것이라 한다(Pool, 1994:131-146).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게이츠 회장의 강연에서도 PC산업이 도래함으로

써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PC산업의 도래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발달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체제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EMAIL,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LAN이나 광통신망 등과 같은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체제가 가능해 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컴퓨터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되려면 지능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체제가 되어야 하며, 분산형의 컴퓨터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은 산업계를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카다로그나 정보 등이 종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CD롬과 같은 전자출판과 영상회의, 비디오 회의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설명하면서 컴퓨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컴퓨터 이용자의 확대와 컴퓨터 속도의 빠른 발전과 소형화 추세·편리성 등이 표준특성으로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이 PC산업을 통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네그로 폰테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전세계에서 팔린 컴퓨터 중 65%가 가정용이고, 인터넷 사용자수는 매달 10%씩 증가해서 이런 추세라면 2003년에 이르러 전 세계 인구 수에 육박하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크고 작은 「전자공동체」는 국민국가가 신봉하던 여러 가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정치가들이 국가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을 때 「디지털 세계의 아이들」은 편협한 민족적 근친성의 한계를 넘어 상호이해를 키워가고 있음을 지적했다(네그로 폰테, 1995).

네이스비트도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체제에 의한 가상부족(virtual tribes) 혹은 전자부족(electronic tribes)라는 개념이 생겨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컴퓨터와 휴대용 전화 등과 같은 첨단기술 장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경우 유대는 돈독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자우편 역시 새로운 부족을 형성시키며 전자기술은 우리를 세계화의 길로 인도하는 동시에 더욱 부족화시키기도 한다고 본다(Naisbitt, 1994: 34-35).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을 통해 상호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공동체적인 부족이 형

성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케이블TV 등과 같은 첨단장비들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은 산업사회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대중문화를 주도했던 미디어와는 달리 탈대중화·개성화·고급화 되는 추세를 띠게 된다.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폭증 속에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2) 기술·인간·자연의 조화

미래사회는 기계·전자혁명, 재료혁명, 생물혁명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도 정보 기술문명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정의와 영역이 확대되어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 기술에서 인간과학에 기초한 소프트웨어적 기술까지 포함된다. 산업사회가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미래사회는 기계적 작업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정보 기술로 대체되는 시기이다(일본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1986:12).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설비의 자동화 현상은 노동인력을 컴퓨터나 로봇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야기시킴으로써 대량의 실업사태를 촉발할 요소를 안고 있다. 컴퓨터 기술이 정보화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화가 산업혁명에서 하는 역할과 똑같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과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무인공장, 공정의 자동화가 현실화됨으로써 노동자의 역할을 위협하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해오던 역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인 만큼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노동조합은 새로운 기술이 그 혁신이 이루어진 뒤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상상하고 우리가 돌입하고 다가서고 있는 세계는 비판적인 세계라고 예측한다(Naisbitt, 1983:40).

하지만 비인간적 성질을 지닌 새로운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에 도입되면 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적 대응이 나타나고 인간가치를 발달시키려는 자조적인 노력이 나타난다. 네이스비트는 이를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사회로 표현하고 있다(Naisbitt, 1983:55). 고도 기술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기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기술이 인간을 관리하게 된다. 기술은 개인적인 효율이나 책임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기술을 주도하려는 인간의 개인적 성장욕구도 갖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성장욕구는 규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인간성 회복운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한편 케네디는 21세기를 앞두고 인류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시련은 인구의 힘이 분출시킨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술의 힘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21세기의 과제라고 본다 (Kennedy, 1993).

이와 같이 21세기 사회는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인류공멸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사회의 급격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해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인류는 자연이란 정복의 대상이 아닌 더불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인간소외의 문제, 인간성 파괴의 문제 또한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면서 과학·자연·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서는 생태학적 인간관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주체와 책임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산업사회에서 경험했던 과학기술만의 발달에 의한 인간소외와 자연훼손 및 환경공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재생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균형을 이루는 인간생존과 가치부여의 전략이 인류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면서 산업사회의 공업화,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소외와 환경파괴의 20세기관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래사회의 돌파구는 기술과 경제력에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인간가치의 부활에 달려있다. 인간가치를 재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기술적 도전-핵전쟁과 환경파괴에 의한 인류공멸의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미래의 발전은 경제력에 의한 물질적 풍요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과학기술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과학기술과 산업화는 인간에게 의미가 없다. 경제발전의 모델은 인간가치와 환경적 자생력을 높이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3)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

1) 네트워크형의 조직

네트워크형의 수평사회는 앞서 제시한 분산화, 소규모화, 분권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중앙에 집중되어있던 위계적 명령체계가 하위단위의 소규모 체제간의 연계를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한이 분산되고 세분된 단위는 자치적이며 동시에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망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이다. 미래사회에서 이러한 네트워크형의 조직형태는 정부, 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피라미드형의 위계체제는 이제 더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산업사회의 수직적 상하 위계질서라는 권력구조는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조직의 원리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됨으로 인해 피라미드형 조직이 네트워킹형 조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산업사회에서 사회조직의 형태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하에서 피라미드형 조직이 효율적이었던 반면에 정보, 지식중심의 산업구조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네트워킹형 조직형태가 보다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형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킹이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생각이나 정보, 자원 등을 나누어 갖는 일을 말한다. 즉, 네트워킹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개인과 개인끼리의 제휴, 집단과 집단끼리의 제휴를 낳는 의사소통-이 네트워크인 것이다. 자조운동의 육성이나 정보의 교환, 사회의 변혁, 생산성과 노동조건의 향상, 자원의 유효한 이용 등이 네트워킹의 목적이다. 또 네트워킹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다른 어느 방법 보다도 신속하고 인간미가 풍부하며 에너지면에서도 효율적이다(Naisbitt, 1983:186-187).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나누어 갖고 연락을 취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교환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들을 창출하고 이를 나눠 갖게 된다. 구조적인 면으로 보아 네트워크 조직에는 관료 기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수평적 연대라는 대등한 인간관계가 있다. 네트워크 조직은 사회에 작용하여 사람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취한다. 네트워크 조직 속에서는 회원들이 서로를 대등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중요시 하므로 정보 앞에서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등한 존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네트워킹은 평등주의에 의거한 정보교환 조직이다(Naisbitt, 1983:190-195).

정보혁명에 의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수요자 중심의 권력이동을 야기하고, 연결망 형태의 인간적 조직과 의사소통 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관료적 위계체제는 효율성을 상실하여 네트워킹 체제로 이행하게 되며, 중앙집중적인 사회 통제체제에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체제로 이행하게 된다. 위계체제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평면화되거나 폐지된다. 지식의 관료적 조직화는 흐름이 자유로운 정보체제로 대체된다. 조직단위의 수와 다양성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Toffler, 1990:297-298).

네이스비트도 역시 피라미드형 위계체제는 더이상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하이얼라르키의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라밋형 구조는 붕괴되어 네트워킹형의 수평사회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Naisbitt, 1983:182-183). 즉, 산업화 경제 시대의 피라밋형 구조하에서는 엄하게 통제, 규제되고 정보 전달의 속도가 저하된 특성을 가지는 데 정보화 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하므로 피라밋형 구조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의 중앙집권적 기구들이 거대화됨에 따라 피라밋형 구조들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소규모의 지방분권적인 단체들이 출현함으로써 유연하게 서로 제휴하는 형태를 취하고 질서정연한 구조에 의존하는 일이 훨씬 적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권력분산형의 작업집단, 동료간 협력, 상사는 승낙 내지는 추인하는 형태의 경제조직이 효율적임을 인정받게 된 점, 그리고 테크놀러지가 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미국 국민들은 관료적 하이얼라르키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본질을 더욱 불쾌하게 여기게 되고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된 점 등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조직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종래의 조직이 붕괴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트워크의 힘을 빌면 필요한 정보만을 가능한 한 신속히 선택·수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이얼라르키가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득이 조직의 영역을 넘어 서로 상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 중대한 사회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네이스비트는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종래의 여러 기구가 붕

피된 점, 둘째로 과잉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 셋째로 과거에 이미 하이얼라키가 파탄을 일으킨 점이다(Naisbitt, 1983:195-196).

드러커는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사회와 더불어 틀림없이 조직의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는 조직의 기능은 지식을 생산성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지식이 지식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모든 선진국 사회에 중심이 되고 있으며 지식들이 전문화되면 될 수록 지식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 했다. 그에 의하면 조직은 특수목적의 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업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현대 조직은 전문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의 조직이고, 동반자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들 사이에는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서열이 없다. 지식의 서열은 그 고유한 우월성이나 열등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통의 과업에 공헌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의 조직은 상사와 부하로 구성된 조직이 될 수는 없다. 현대의 조직은 동료의 집단으로서 조직되지 않으면 안된다(Drucker, 1993:88-98).

드러커는 지식에 근거한 빠른 변화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 조직에 적용되는 것이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모든 조직은 그 조직구조 자체에 변화의 관리를 짜 넣어야 한다. 조직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 역시 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은 조직구조에 세가지 체계적인 관습을 짜넣어야 한다. ① 조직은 조직이 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② 모든 조직은 개발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것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모든 조직은 혁신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혁신은 체계적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탈자본주의 사회는 분권화되어야 한다. 탈자본주의 사회의 조직은 빨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한다. 그 결정은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에 밀착되어, 기술적으로 타당하게,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환경과 인구 그리고 지식에 기초하여 내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혁신의 기회로 보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Drucker, 1993:101-104).”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앞으로의 사회는 수평적 인간관계 형태의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 불가피 하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네트워

크형 체제의 효율적 성격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모든 조직은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기업의 소규모화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 그 경제단위들의 수효가 늘고 규모가 축소되지만, 비중은 더욱 커진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제의 규모확대와 그 경제단위들의 규모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개방될수록 규모가 보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비경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들이 기업구조를 기업가의 네트워크로 분권화,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날의 거대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해체시켜 새로운 구조, 즉 다수의 자율적 기업단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어야만 한다. 요즘 기업체의 조직개편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도 그것이 생존을 위한 최상의 전술이기 때문이다.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의 구태를 벗어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규모의 경제가 상승효과와 시장적응성, 순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기업을 모색하는 기회의 경제에게 자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과두체제에서 독립조직의 네트워크 체제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권력핵심부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매개로 한 수평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Naisbitt, 1994:18-24).

토플러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부서를 세분화하여 자치적인 이윤센터를 만들어가고, 조직을 계속 개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제를 점차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첨단산업, 서비스업, 전문직업 그리고 많은 정부기관에서 중앙집권적 제도의 중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붕괴되고 중앙집권화된 통제 대신에 복수명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Toffler, 1989:319-320). 경제부문에서도 산업사회의 국가단위의 시장인 국민경제 개념은 이제 지역별·부문별 단위인 하위국민경제로 급속하게 분해되고 있다고 본다. 새로운 경제에서는 분해되어 점차 탈중앙집권화되는 경영만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 경제 역시 거위가 세계적·획일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점점 더 탈중앙집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Toffler, 1989:321-322).

이와 같은 기업의 소규모화 현상은 모든 조직이 네트워크화 하는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축소와 소규모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3) 지방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 제도

한편, 네트워크형 수평조직의 구조개편 현상의 하나로서 기업의 소규모화 현상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확산이라는 권력의 분산현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 테탕트는 새로운 권력 이전과정에서 개인 및 사회조직이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므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제2의 물결인 산업시대의 국제관계는 착취와 수탈 그리고 분쟁이 큰 흐름을 이루었다. 이 시대의 제국주의는 주로 대량생산을 위해 대량의 값싼 원자재를 구입해서 다시 대량생산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띤 것이다. 그러나 산업형태가 비대량화되어 원자재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원자재당 소요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원자재가 가지는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즉, 기술수준의 변화는 원자재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국가간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정보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권력의 분산현상을 가속화시킨다. 결국 강대국이 과거와는 달리 약소국을 착취하기 어려워지며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공성진, 1991).

토플러는 공장의 원리가 지배하던 산업사회의 표준화, 규격화, 극대화, 집중화, 관료화의 원리가 제3파 정치에서는 다양화와 탈대중화로 규제와 규율에서 벗어나고 의사결정권을 아래·주변으로 분산시키는 정치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대중이 해체되고 다양성과 자율, 이견이 존중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Toffler, 1995). 그에 의하면 정보의 혁명은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는 사회체제의 다양화를 초래한다. 또한 이런 다양화 현상은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변화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정치구조의 변화로 귀결된다. 즉, 요구조건의 개별화로 정당에 대한 신뢰감은 저하되고 이슈별 그룹의 대두가 폭증되며 따라서 정당은 소규모화되고 지방분산화될 것이며, 특정 정치이념이 전체 사회를 지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혁명 시대에는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만이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경제적 희생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한다. 이 시대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 빠른 의사결정으로써 변화에 대처해야 하므로 중앙집권적 권력은 지방분권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이 과부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토플러는 정치분야에서 탈중앙집권화된 소규모 집단들은 파벌정치의 붕괴와 중앙정부의 능력부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규모집단들은 중앙정부 보다 더 지역적 조건과 주민의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Toffler, 1989:318).

한편 앞으로의 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소멸하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네이스비트에 따르면 이를 자유시장 민주주의체제로 표현하고 있다.²⁾ 산업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한 간접민주정치를 실시하였던 반면에 지식사회로 변화되면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참여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만인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어느 결정이 내려질 때 그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Naisbitt, 1983:171-172).

한편, 네그로 폰테는 디지털 세계가 일자리를 빼앗거나 지적 재산권의 남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경계를 없애며 개인의 권리를 강화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네그로 폰테, 1995).

2) 이에 따라 네이스비트는 전자기술의 혁신으로 대의민주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인 직접민주주의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소비자지향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디어 자유시장 민주주의는 대표를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것이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결정되고 또 그런만큼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아이디어와 견해의 자유시장이 형성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Naisbitt, 1994:64-65).

그리고, 네이스비트에 의하면 오늘날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를 맞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대신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려줄 사람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Naisbitt, 1994:63).

따라서 지도력의 새로운 형태는 고도로 복잡해진 조직 속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여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성의 관리에 있어서 지적 기술들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공성진, 1991:164-173). 산업사회에서의 유능한 지도자 또는 경영인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였음에 반하여 다가올 정보화 시대에는 복잡한 조직 내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능력을 지닌 자가 유능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배규한, 1990).

네이스비트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통치의 핵이라고 하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자유시장 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종말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권력은 국가의 손에서 개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권력구조는 수직적 상하위계질서에서 수평적 횡적인 네트워크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제 국가보다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Naisbitt, 1994:64-68).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기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갈수록 그들의 삶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권력은 치밀하게 조직된 위계질서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이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표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만인 정치시대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서 정치는 권력이 분산된 민주적 체제로 전환되며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이고 비약적인 급성장은 정치권력의 분산화와 직접민주정치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 조직의 새로운 형태는 정치·경제분야의 소규모화, 분산화, 분권화의 성격을 가진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를 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세계화 사회

1) 세계 경제체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인류는 생활영역의 확대와 함께 의식과 사고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될 것이다. 과거의 폐쇄적인 민족적·이데올로기적 장벽은 무너지고, 국가·민족간의 교류와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상호공존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단일체제로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는 세계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심화되는 국가간 경쟁의 틈새에서 지역주의와 전략적 동맹이라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네이스비트는 국가 경제체제가 세계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메가트렌드에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각 주는 연방정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제 시대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더욱 상호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Naisbitt, 1983:77). 그리고 세계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독립과 자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동맹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은 세계 시장에서 음과 양의 관계가 되었다. 이들은 언제나 균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변화한다.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협력관계, 즉 새로운 전략적 동맹은 여전히 경쟁관계로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원의 협력을 요구한다. 전략적 동맹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한 회사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전략적 제휴는 회사나 제품에 대한 국적에 상관없이 세계 단일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날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전략적 동맹이 성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Naisbitt, 1994:27-29).

드러커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보호무역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무역 또한 그들 스스로 작동하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그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무역과 효과적인 경쟁을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적 지역단위이다. 이 단위는 높은 보호장벽 아래 새로운 고도 기술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고도기술의 속성, 즉 지식산업의 속성 때문이다. 고도 기술산업은 어떠한 경쟁도 물리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안정될 수 있다. 지식경제는 적정한 규모의 주권국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경제단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또한 자신의 지역경제 단위 속의 산업을 보호하는 능력과 보호무역주의나 자유무역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다른 무역블록과 교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주의는 범국제적인 진정으로 초국가적인 기관을 설립하여야만 한다(Drucker, 1993:228).

한편 현재 세계 경제체제의 진전에 대비하여 최근 각 국가와 지역이 내놓은 처방은 다양하다. 서구라과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최첨단의 통상전략을 개발하면서 민족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실험에 나섰고, 탈규제의 기치 아래 국가의 권한 및 역할을 축소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냉전종식의 ‘이익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을 강행하는 동시에 기이한 관리무역을 제안하고 북미 지역에 배타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신설하는 이중성까지 보였다.

즉, 생존전략의 다층화되고 외교의 판이 다시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에 생겨나는 동시에 블록화의 위험성에 맞서 시장개방을 촉진시킬 세계 무역기구가 발족하였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 안에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 놓고 상대하는 역내 국가에 따라 개방과 연대의 폭을 차별화하는 소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마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고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전통적 외교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제정치의 무대는 다층화하고 있다. 중간과 최상의 층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실험이 동시에 펼쳐질 때 민족국가라는 아래의 다른 층에서는 일방주의적 생존전략을 더욱더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경원·임현진, 1995).

이렇듯 지역주의라는 것은 세계 경제체제의 확산이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세계화에 대한 반동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나 지역블록화 현상등은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불가피한 대처방안인 것이다.

2) 주권 국민국가의 해체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화 현상의 패러독스로서 부족주의와 지역주의 현상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자기 민족에 대한 뿌리 또는 민족, 혈연, 언어, 풍습, 문화의 공통적 특성에 따른 부족주의가 발현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지역블럭·국가블럭 현상이 역설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할 필요가 더욱 커지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 될 수록 순수한 민족주의 정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심각해진다(한백연구재단 편집실, 1991:200).

이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계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부족주의적 경향, 열린 민족주의, 열린 부족주의 등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민족국가단위가 개별화·파편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단위, 부족단위, 동맹관계 형성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을 많은 학자들이 시사하고 있다.

드러커는 근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근대 민족국가 또는 주권 국민국가를 위협하는 세가지 요인들로 종족주의, 지역주의, 범국제주의를 제시하면서 이들 요인들에 의해 주권 국민국가가 해체되어갈 위기에 놓여있다고 본다(Drucker, 1993). 그에 의하면 종족주의는 민족을 종족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라 하면서 세계가 국제화되면 될 수록 세계는 더욱 더 종족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가 행정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종족주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종족주의가 나타나게 된 주요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인데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뿌리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범국제화된 세계에서 살게 되면 될 수록 지역적 뿌리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Drucker, 1993:231-233).

이러한 종족주의 현상은 주권 국민국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인 지역주의로 연결되는데 주권 국민국가는 단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

속적으로 상실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내적으로 선진국들은 빠른 속도로 여러 조직들로 구성된 다원사회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정부의 몇 가지 기능들은 범국제적으로 되거나 지역주의적으로 되고 있으며 - 유럽공동체가 그 한 예이다 - 어떤 것들은 종족화하고 있다(Drucker, 1993:33).

한편 범국제주의에 따른 보편적 세계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보편적 행동규범을 채택하게 되고 인류가 이념 공동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환경, 범죄, 경제, 국제관계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안들에 대해 이제는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가 공통된 생활양식과 가치추구,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의존관계가 형성된다. 즉, 드러커의 지적처럼 돈과 정보의 통제는 국가주권의 핵심영역이고, 자본과 정보의 흐름은 상호 의존성의 증대와 통신혁명으로 말미암아 범국제화되어, 더이상 개별주권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파괴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조치 필요, 테러리즘 추방을 위한 범국제적 조치와 범국제적 기구에 대한 필요성, 범국제적 군비통제, 인권을 감시하고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범국제적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Drucker, 1993:220-225).

네이스비트에 의하면 글로벌 패러독스란 개념을 통해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글로벌 패러독스란 보편화가 진행될 수록 오히려 우리의 행동은 강력한 부족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새로운 행동규범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 전 세계의 모든 공동체들은 하나의 보편적 행동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는 현재는 부족주의 개념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시대라고 하면서 부족주의와 민족주의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의 부족주의 개념은 드러커의 종족주의 개념과 유사하다. 즉, 18세기 부터 2차대전 말엽까지 유행하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가 국제적인 원칙이나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한다는 신념체제로 2차대전 이후 약화되었으며 부족주의는 종족성·언어·문화·종교 등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자신이 속한 족속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개념이며 흔히 보편주의·세계주의에 대한 대립개념인 민족주의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고 설명한

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부족적인 것이 새롭게 부각되기 때문에 부족주의의 대두는 세계 도처에서 종족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편화가 진행될 수록 오히려 우리의 행동은 강력한 부족화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즉,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통합될 수록 보편화되어 가는 것들은 많아지면서 부족적인 차원으로 남아지는 것들 역시 보다 비중있고 강력해 지므로 이에 따라 민족국가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동시에 더 많은 부족국가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Naisbitt, 1994:33-35).

이렇듯 근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근대 민족국가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그 결속력과 권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세계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혈연·지역·민족·문화 등의 공통적인 매개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단위, 블록단위의 결속을 통해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자생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자민족 고유의 독특성, 독자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3) 고유문화의 중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가 보편화되어 감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즉, 보편적인 세계화의 추세 속에 혈연·언어·종교·풍습 등에 의거한 고유문화의 독자성, 독특함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부족주의 또는 종족주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스비트와 애버딘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생활양식이 유사성을 더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역반응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다. 획일화에 대한 반발, 문화와 언어의 독창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갈망, 미래의 영향에 대한 거부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양식이 점차 닮아감에 따라 종교·언어·예술·문학에 대한 집착도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바깥 세상이 더 유사해 짐에 따라 내부에서는 전통을 더욱 소중히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확장되는 균일화에 직면하여 그것이 종교적이든 문화적·국가적·언어적 혹은 인종적이든간에 주체성을 보존하고자 할 것이다. 깊숙히 흐르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 민족주의는 도전 받을 때 혹은 이의 표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표면화되고

우리는 점점 나아가면 갈 수록 점점 더 우리의 독특함을 주장하게 된다고 한다(Naisbitt & Aburdene, 1990:136-175).

이와 같이 보편적인 세계문화가 확산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고유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민족 고유의 독특성을 추구하는 현상은 세계 화사회에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다원화 사회

21세기는 의식적 측면에서 가치관의 다양화를 초래하여 다양성, 개성, 독창성, 창의성 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다원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대중소비, 규격화, 획일화된 삶의 형태는 개인적 선택에 의한 탈대중화,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삶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경제적 풍요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물질적, 유형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무형적 가치가 우선하게 되고 삶의 질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된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어 사회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량의 증가는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데, 조직원리, 노동 통제방식, 문화생활, 개인간의 인간관계와 사고방식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초래한다. 즉, 규격화, 대규모화, 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이익추구 방식에서 탈규격화, 다양화, 탈대중화를 기반으로 한 범위의 이익추구 방식으로 이행하게 된다(일본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편, 1986:12). 인적 자원에 대한 이해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군사적, 물리적 인간자원을 중시했던 반면에 산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인간자원을 중시하였던 것에 반해 미래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적 인간자원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양적·기계적 복잡성, 대중소비, 집단교육,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오락, 대중정치활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성과 집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확대되면서 자율성과 개별성이 중심적인 특성이 된다. 즉, 산업사회

에서 소외를 경험했던 개인은 미래사회에는 주체성을 지닌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받게 되며, 다양한 개성들이 문화적으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성·개성·자기만족 등이 중시됨으로써 가치구조를 비롯한 생활양식, 소비패턴 등이 크게 변화된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선택이 중시됨에 따라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라이프 스타일 또한 개성적이며 자기만족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이 개인중심의 개성적 선택이 중심이 됨에 따라 산업구조도 그에 적합한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경제적 풍요에 따른 정신적인 만족의 추구로 문화·예술 산업이 부흥할 것이며,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여행·레저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다. 개인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개발과 자기만족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개성중심의 구매욕은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또는 주문생산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네이스비트와 애버딘은 정보산업이 발달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술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욕구가 늘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20세기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산업화가 인간을 기계로 대체했고 전체주의와 전쟁은 인간·박물관·성당들을 파괴했고 20세기의 끝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냉전의 시대는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 정보산업이 발달한 사회는 예술을 옹호하는 부유한 계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부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Naisbitt & Aburdene, 1990:68-69).

다니엘 벨은 정보화·자동화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과 수명연장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 예견했다. 즉, 21세기에 주어지는 여가시간을 자기개발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과의 대결을 통한 일을 해왔으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기계에 대결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제 21세기 탈공업화 시대에서 인간이 대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인간과 노동의 관계가 인간 대 인간의 사회적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을 마

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연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며 여가생활을 자연과 함께 즐기려는 경향을 나타낸다(Bell, 김상현 1994:57-59).

산업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 그에 따른 정보문화의 확산이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 인정욕구와 책임 회피, 가치관의 부재, 국제화, 서구화, 충동성, 영상매체 선호, 모험적 감각적 레저활동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김삼중, 1994:37; 임광진, 1994:52;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17).

다니엘 벨에 의하면 번영과 교육은 후세대들을 자기중심의 만족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양보의 만족감과 시민정신, 즉 집단적 혹은 사회 중심의 가치체계에 부딪혀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본다(공성진, 1991:164-173). 산업구조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재편성되어 20세기의 대량생산 체제는 끝나고 자기만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개성화, 다양화의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Friedan, 김상현 1994:110). 특히 한 쪽이 많이 가질 수록 다른 한 쪽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적어지는 제로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욕망을 억제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사회는 물질적 추구에서 정신적 추구의 시대로 돌아가야만 한다(Thurow, 김상현 1994:100). 한편, 사람들이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자립하게되면서 개인 존중주의는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Naisbitt, 1983:168).

신앙으로서 마르크시즘의 붕괴는 사회에 의한 구원이라는 신념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회에 의한 구원이라는 신념의 종말은 확실히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 세계로 주의를 돌리게 한다. 그것은 개인,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지도 모른다(Drucker, 1993:36-37).

네그로폰테는 특히 미래사회는 정보 화사회를 넘어 탈정보화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측했다. 탈정보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진정한 개인의 출현이라고 하면서 중앙집중화한 정보의 홍수 속에 해매는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시대」가 온다고 했다(네그로 폰테, 1995). 네이스비트와 애버딘에 의하면 정보화 경제하에서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경제의 초점이 옮겨짐으로써 개인의 역할이 증대한다고 본다. 즉, 경제가 세계화됨에 따라 개인은 산업사회에서 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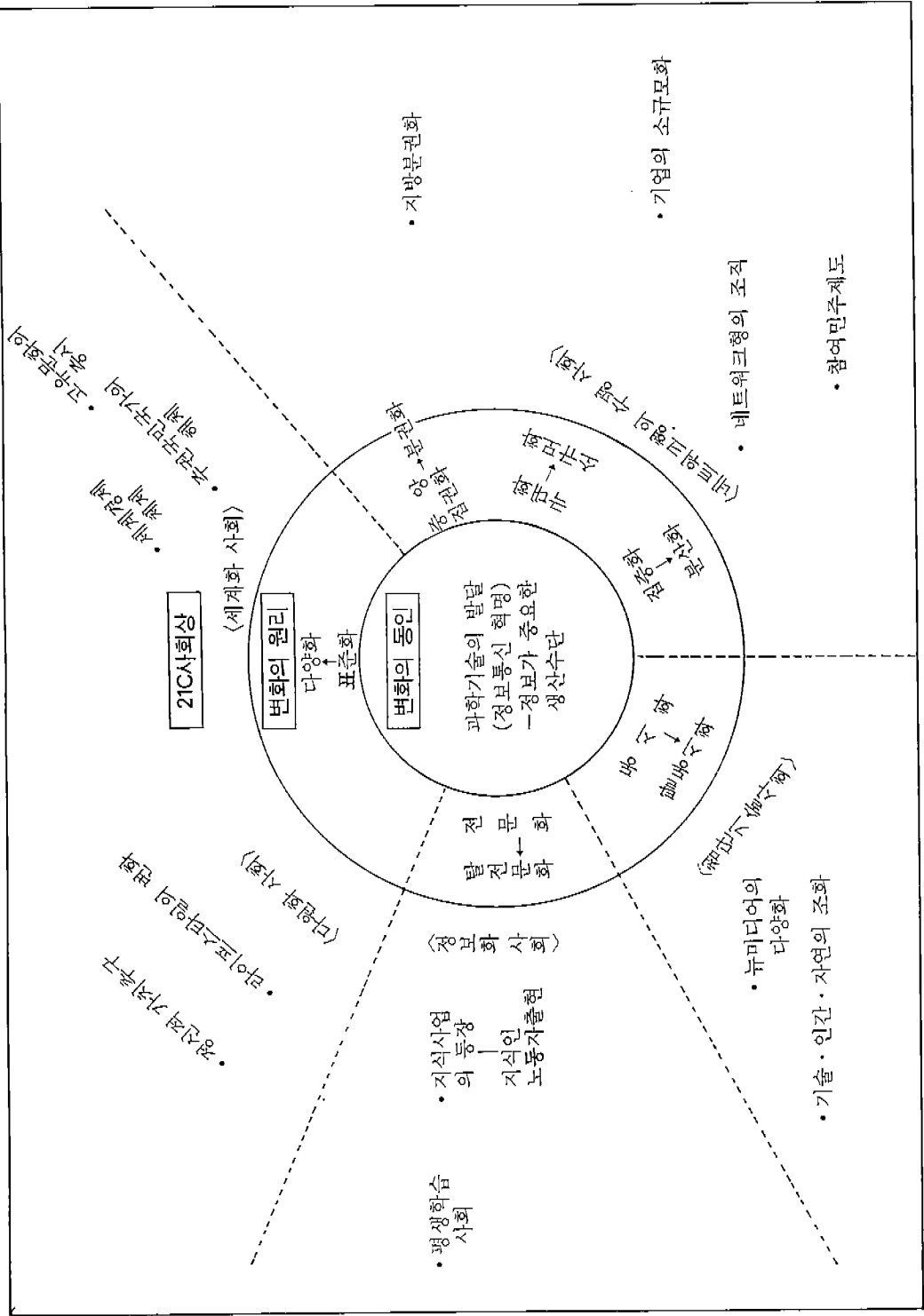
는 것이다. 한편 세계는 정부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에서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로 심오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려는 극심한 재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새로운 개인의 시대는 새로운 세계화의 시대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단이 붕괴되고 개인만이 부를 창조함에 따라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기술은 규모와 위치의 중요성을 바꾸어 버렸고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켰다. 기술이 개인의 능력을 더해주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개인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보다 자유스러운 권한이 부여된다. PC를 이용한 전 세계적 연결망을 통해 개인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개인에서 세계적인 네트워크체제로 나아간다. 이와 같이 개인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소비자 우선의 경향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Naisbitt & Aburdene, 1990:109-110, 348-361).

이렇게 개인의 권한이 증대함에 따라 소비자 우선의 경향이 대두하면서 산업사회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소비문화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되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체제가 확립되어 토플러의 지적처럼 생산소비자의 개념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되어 레저 및 정보·통신용품 수요 증가, 미디어에 대한 높은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외식산업 소비 증가, 여가·취미의 다양화 및 고급화, 쇼핑행위의 변화, 값싸고 질 좋은 상품구입을 위한 가격할인점·백화점 중심의 쇼핑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사회는 다원화 사회로 규정되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개성이 존중된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의 시대가 지나고 정신적 풍요의 시대를 갈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즉 개인존중·개성화의 시대인 동시에 문화적 전성시대 및 인간존중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화의 시대에 개별적인 선택이 요구되고 중시될 것이며 상호협력의 가치가 중요시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II-1〉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



III. 델파이 조사결과

21세기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육성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청소년의 삶과 관련한 미래사회의 특성,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 분야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개혁분야,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의 양상, 미래사회에서 예견되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유형, 청소년육성 체제의 개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래사회의 변화로 예견되는 일반 사회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환경의 변화, 청소년의 문제행동, 미래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 청소년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제2차 질문에서는 제1차 조사 결과분석에 터하여 각각 항목에 선택지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진술토록 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제1차 델파이 조사대상은 각 시·도의 청소년육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가, 청소년 관련학자 및 청소년 단체·시설에서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의 지도자 등 총 35명이었다. 각 전문영역별 조사대상과 회수율은 다음 <표 III-1>와 같다. 제1차 조사결과 처리는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해 평균값이나 가중치를 이용한 분석을 하지 않고 각 의견을 동일한 가중치로 간주하여 응답수에 대한 빈도만을 분석하였다.

제2차 조사대상은 일차적으로 제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의미있는 반응을 선별하고 현장지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의 경우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총 117명을

대상으로 배포한 결과 92부를 회수하여 78.6%의 회수율을 보였다. 결과 분석은 회수한 92부의 응답수 중에서 무의미한 반응을 보인 4부를 제외한 88부를 최종처리하였다. 최종 분석처리한 88부는 청소년 관련학과 행정종사자 응답수 14부, 청소년 현장지도자 응답수 78부 중 4부를 제외한 74부이다.

제2차 조사결과 처리는 각 문항별 응답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점수에 따라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즉, 3순위까지의 응답지의 경우 1순위 6점, 2순위 4점, 3순위 2점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하였으며, 5순위까지의 응답지의 경우 1순위 10점, 2순위 8점, 3순위 6점, 4순위 4점, 5순위 2점으로 가중치를 주고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III-1> 제1차 조사대상

집 단	조사인원	응답인원	회수율(%)
청소년 행정종사자	15	8	53.3
청소년 관련학과	10	8	80.0
청소년 현장지도자	10	8	80.0
계	35	24	68.6

<표 III-2> 제2차 조사대상

집 단	조사인원	응답인원	회수율(%)
청소년 행정종사자 및 관련학과	17	14	82.4
청소년 현장지도자	100	78	78.0
계	117	92	78.6

2. 조사결과 분석

(1) 제1차 조사결과 분석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변화의 원칙 및 양상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형태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미래사회의 특성을 5가지, 청소년 문화와 생활의 변화양상을 3가지를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차 조사에서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미래사회의 변화로는 정보화, 세계화 및 국제화, 지방화 등과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원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가족해체와 사회 공동체의식의 결여 및 개인주의적 경향의 심화와 함께 윤리도덕성의 상실과 같은 변화양상에 대한 진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표 III-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업주의 사고와 문화, 개인주의적 사고와 공동체의식의 결여, 청소년 비행의 증대 등과 같은 순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예견되는 청소년 일탈행동은 <표 III-5>와 같이, 청소년약물 오·남용 문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관련 비행과 범죄, 폭력, 뉴미디어에 의한 범죄행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 가장 장애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표 III-6>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과 제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아 학교교육의 전반적 문제가 청소년육성 분야의 개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재정적 문제,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부족 등이 비교적 높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육성 분야에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분야로는 <표 III-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의 역할 강화와 교육개혁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청소년 문화의 육성과 재정지원과 배분 등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I-3>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미래사회의 특성

항 목	응 답 수		소 계(빈도:%)
	청소년행정가	청소년학자 및 지도자	
○ 윤리도덕성의 상실	7	4	11(45.8)
○ 가족해체, 사회공동체의식 결여, 개인주의	7	9	16(66.7)
○ 물질만능과 상업주의 만연	6	3	9(37.5)
○ 정보화	6	16	22(91.7)
○ 전문화	4	12	16(66.7)
○ 지방화	3	16	19(79.2)
○ 세계화, 국제화	3	16	19(79.2)
○ 인간소외	2		2(8.3)
○ 개인의 역할증대		2	2(8.3)
○ 기 타	2	2	4(16.7)
계	40(8명)	80(16명)	120(24명)

<표 III-4>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생활과 문화의 양상과 문제

항 목	응 답 수		빈 도 (%)
	청소년행정가	청소년학자 및 지도자	
○ 상업주의적 문화와 사고	7	11	18(75.0)
○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의 결여	4	10	14(58.3)
○ 다양한 여가활동	3		3(12.5)
○ 성문화의 개방	3	2	5(20.8)
○ 부족적 집단경향	2	5	7(29.2)
○ 정보통신을 통한 의사소통문화		6	6(25.0)
○ 청소년 비행의 증대		8	8(33.3)
○ 독립세대 형성의 증대		4	4(16.7)
○ 기 타	5	2	7(29.2)
계	24(8명)	48(16명)	72(24명)

<표 III-5>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유형

항 목	1 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폭 력	5	4	2	11
◦ 약물남용	7	2	6	15
◦ 미디어 범죄	5	4	2	11
◦ 성비행 및 범죄	3	2	3	8
◦ 가출	2	4	6	12
◦ 자살		2	3	5
◦ 존중심 결여		2		2
◦ 부족한 동조성	1	1		2
◦ 기타	1	3	2	6
계				72(24명)

<표 III-6> 청소년육성 체제 개혁에 대한 장애요인

항 목	1 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입시위주 교육과 제도	10	9	5	24
◦ 변화에 소극적인 관료행태와 제도	2	1		3
◦ 재정적 문제	3	6	6	15
◦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	4	2	4	10
◦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부족		2	1	3
◦ 청소년육성 체제의 인식결여 와 사회적 신뢰부족	2	1	3	6
◦ 이해집단간의 조정장치 결여	2	2	2	6
◦ 기타	1	1	3	5

<표 III-7> 현재의 청소년육성 체제에서 시급한 개혁이 요청되는 분야

항 목	1 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가정역할 강화와 교육개혁	8	11	5	24
◦ 재정지원과 배분	3	1	5	9
◦ 청소년 문화 육성	4	7	5	16
◦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반영	4			4
◦ 새로운 청소년상 정립	3		1	4
◦ 국가관, 민족의식 정립	1			1
◦ 청소년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2	2	4
◦ 도덕, 윤리성의 회복	1	2	3	6
◦ 기타		1	3	4
계				72(24명)

(2) 제2차 조사결과 분석

1) 일반 사회환경의 변화

미래사회의 일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주요한 고려요소이다. 응답자들이 미래사회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로는 ‘정보혁명에 의한 시·공간 제약의 탈피’를 가장 주요한 변화요소로 제시하였다. 미래사회에서 정보매체의 발달은 과거 산업사회에서와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동시성은 결국 교육이나 육성에 있어 권위나 권력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육성의 권위는 가르치는 자 또는 지도자들에게 있었지만, 지식과 정보의 동시성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나 지도자와 학습자나 청소년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동시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 권위나 청소년 지도의 전문적 권위가 학습자 또는 청소년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된다.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미래사회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정보혁명에 의한 시·공간 제약의 탈피’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여가중심과 정신적 만족추구의 경향을 미래사회의 주요 변화로 꼽았으며, 국제화·개방화에 의한 국가간 교류증대를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의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자율적 사회통제 현상의 대두를 네 번째 주요 변화양상으로, 그리고 연결망 형태의 조직과 관계의 중요성 부각을 다섯 번째로 지적하였다. 끝으로 분권화, 지방화, 부족주의적 경향의 대두를 미래사회의 주요 변화양상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양상에 대한 지적은 청소년 관련학과 행정가 및 현장지도자간에 변화의 중요성의 가중치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예견의 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밖에 국가간의 이익추구에 따른 무한경쟁과 국가나 인종간 갈등 심화와 종교적 문화적 갈등 증대에 따른 분쟁발생 빈번, 계층 및 계급격차 심화, 가족해체와 가족기능의 약화의 측면을 미래사회의 변화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

았다. 아울러 세계화 경향과 더불어 민족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경향과 자연으로의 회귀와 환경보존 등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인간가치의 존중의 경향을 미래사회의 변화형태로 지적하고 있다.

<표 Ⅲ-8> 일반 사회환경 변화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정보혁명에 의한 시공간 제약의 탈피	292(1)	54(1)	346(1)
고소득에 따른 여가중심과 정신적 만족추구	180(2)	48(2)	228(2)
국제화·개방화에 의한 국가간 교류증대	158(3)	24(3)	182(3)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자율적 사회통제	96(4)	20(4)	116(4)
연결망(Network) 형태의 조직과 관계 중요	96(4)	6(5)	102(5)
분권화, 지방화, 부족주의적 경향	64(6)	4(6)	68(6)

2) 청소년관련 환경의 변화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변화 중에서도 청소년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변화에 대한 물음에서는 <표 Ⅲ-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시교육과 경쟁의 과열현상이 미래사회에서도 지속되어 청소년의 삶을 구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입시교육과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예견은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서 압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관련학자나 행정가들에게서는 그렇게 높게 지지되지 않고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성문화의 개방, 가족기능의 약화와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성 부각을 차례대로 주요한 청소년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미래사회의 주요한 변화형태로 차례대로 꼽고 있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외래문화의 침투증대와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가 미래사회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미래사회의 청소년 관련환경의 변화는 청소년육성에 매우 비관적인 형태가 지배적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청소년 독립세대의 증가나 청소년의 권리가 증대되고 인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의 심화가 유해환경의 만연과 많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청소년 관련학자나 행정가들은 청소년의 생활에 더 많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I-9> 청소년 관련환경의 변화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입시교육과 경쟁의 과열	130(1)	14(6)	144(1)
청소년 性문화의 개방	94(2)	20(1)	114(2)
가족 기능의 약화	80(4)	20(1)	100(3)
학교교육 다양화, 청소년 수련활동 중요성 부각	78(6)	20(1)	98(4)
외래문화 침투증대와 민족문화 정체성 약화	78(6)	16(5)	94(5)
청소년 유해환경의 만연	80(4)	12(7)	92(6)
성인과 청소년간의 세대간 갈등 심화	88(3)	2(12)	90(7)
청소년의 개인주의적 경향 심화	64(9)	18(4)	82(8)
윤리도덕성의 약화와 가치관의 혼란	70(8)	10(8)	80(9)
청소년 여가시설 및 문화공간의 미흡	34(10)	10(8)	44(10)
상업주의적 문화와 사고의 심화	34(10)	4(11)	38(11)
청소년 문화의 계층간 불평등 심화	26(12)	10(8)	36(12)
청소년의 권리 증대와 인권 강화	22(13)	0	22(13)
청소년인구 감소와 독립세대의 증가	14(14)	0	14(14)

3)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요인

미래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나 비행 등은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인가. 미

래사회에서 기술·물질 문명의 발달과 정보매체의 다양화 등으로 인간소의 현상이 가속될 것이며, 인간은 거대한 기술문명 속에 생태학적 가치의 균형을 상실하고 말 것인가. 이러한 비관적인 미래사회의 전망 속에서 과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청소년의 성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특성으로 미루어 미래사회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성 문제가 개방될 것이고 이에 따른 성 비행이나 성 폭력 등의 성관련 문제행동이 표출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약물의 오·남용에 시달리는 청소년 문제를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매체의 발달로부터 파생되는 범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범죄의 집단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사회가 다양화, 복잡화되어짐에 따라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 청소년 문제의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학 관련전문가나 행정가들과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성개방에 의한 성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III-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 학계와 행정전문가들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과 학교, 사회 부적응 현상의 증대, 폭력범죄의 집단화, 첨단매체에 의한 범죄증가 현상 등의 순위로 미래사회의 주요한 청소년 문제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장의 지도자들은 첨단매체에 의한 범죄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폭력범죄의 집단화 경향 및 학교와 사회 부적응 현상 순으로 예상하고 있어, 청소년의 학교와 사회 부적응 현상의 순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0>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요인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청소년 성문제 증대	222(1)	44(1)	266(1)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164(3)	30(2)	194(2)
첨단매체에 의한 범죄증가	166(2)	12(5)	178(3)
청소년의 폭력범죄의 집단화	148(4)	24(4)	172(4)
청소년의 학교, 사회 부적응 증대	132(5)	28(3)	160(5)
청소년 가출, 자살의 증대	50(6)	8(6)	58(6)

4) 청소년육성 분야 개혁의 장애요소

미래사회의 변화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 가장 장애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집단 모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학교교육 현장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풍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나 사안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교육만능적 사고의 만연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만능적 사고에 대한 지적은 현재의 청소년의 생활이 지나치게 학교교육에 얽매어 있고 성적과 무관한 활동을 기피하거나 사회가 지나치게 배운 경력으로서의 학력위주로 능력을 평가하며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학교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교육중심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이해부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변화에 소극적인 관료들의 행태와 제도, 청소년육성의 재원부족과 배분구조 등이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비교적 높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 장애요소로 인식하는 점에 대해 현장지도자와 학계 및 행정가 사이에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풍토가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표 Ⅲ-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머지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부족, 청소년육성의 정부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점 등을 장애요인의 비교적 높은 순위로 인식하는데 반해, 학계나 행정분야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만능적 사고, 재정관련 문제나 육성노력의 지속성 결여,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분야의 상호보완성 결여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Ⅲ-11> 청소년 육성분야 개혁의 장애요소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풍토	328(1)	60(1)	388(1)
교육만능적 사고의 만연	88(4)	26(2)	114(2)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부족	96(2)	8(7)	104(3)
청소년육성 정부부처 기능의 분산	90(3)	0	90(4)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참여 및 신뢰 부족	74(6)	14(5)	88(5)
변화에 소극적인 관료행태와 제도	76(5)	10(6)	86(6)
재정적 문제(지속적인 지원과 노력부족)	64(7)	18(3)	82(7)
청소년교육과 육성의 상호 보완 결여	18(8)	16(4)	34(8)
청소년관련 이해집단간의 조정장치 결여	16(9)	0	16(9)
청소년육성 전문집단의 자기이해 추구	12(11)	4(8)	16(9)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결여	14(10)	0	14(11)

5) 청소년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문

청소년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에서 대해서 두 집단 모두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개혁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개선요소로 간주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유해환경 요인을 정화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역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가정의 청소년 보호 및 역할강화를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 부문에서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변화를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간주한다. 이는 현재 청소년육성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과 청소년육성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형태에서 경쟁적 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배분형태의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소년육성 기능의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참여시간을 확보하며 참여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매스미디어와 예술, 문화정보와 관련된 청소년 문화 육성과 청소년 단체의 기능과 역할 제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 부문의 상호 균형적 발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의 지도자와 학계 및 행정 종사자간에는 학교교육의 개혁을 통한 교육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우선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나머지 개선분야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기능통합,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개선, 가정의 청소년 보호 및 역할 강화, 수련활동 지원 등의 순위로 우선적인 개선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학계와 행정 종사자들은 가정의 역할 강화, 재정지원 배분형태의 개선,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교육과 육성분야간의 균형적인 발전, 사회환경의 개선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육성 관련정보망의 구축이나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청소년육성 관련기관간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 확대 등은 크게 지지받고 있지 못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민간기업체의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 청소년 업무의 민영화 추진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대책 등이 청소년육성 분야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표 Ⅲ-12> 청소년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개혁과 학교중심의 활동 탈피	538(1)	114(1)	652(1)
사회환경개선(유해요인 정비, 유익환경 조성, 지역사회 역할 증진)	294(2)	26(6)	320(2)
가정의 청소년 보호 및 역할 강화	168(5)	56(2)	224(3)
청소년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개선	182(4)	40(3)	222(4)
청소년 육성 정부부처의 기능 통합	184(3)	8(11)	192(5)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수련여건 강화, 참여시간 확보, 참여동기 부여)	152(6)	32(4)	184(6)
청소년 문화 육성(매스미디어, 예술, 문화정보)	136(7)	20(7)	156(7)
청소년 단체의 기능 및 역할 제고	116(8)	12(10)	128(8)
청소년교육(학교교육)과 육성분야의 균형적인 발전	98(9)	30(5)	128(8)
청소년 복지증진(어려운 청소년 복지증진, 인권 옹호, 비행예방 강구)	84(10)	8(11)	92(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강화와 입법 화	64(11)	16(9)	80(11)
청소년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54(12)	20(7)	72(12)
청소년육성 관련 정보망 구축	54(12)	4(13)	58(13)
청소년 교류진흥(국제교류 활성화, 지역간 이해 증진, 남북동질성 회복)	20(14)	4(13)	24(14)
청소년 서비스(행정 포함) 전달체계의 개선	18(15)	0	18(15)
청소년육성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형태 및 권한 조정	18(15)	0	18(15)
청소년육성 서비스 기관간의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 확대	8(17)	2(15)	10(17)

6) 청소년육성 분야 개선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청소년육성 관련서비스 기관이나 기구간의 관계를 포함한 청소년육성 구조의 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청소년육성 분야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육성 구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율성 및 의사결정 권한의 증대 및 지도자, 부모, 청소년 간의 인간관계의 개선을 지향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에 높은 지지를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육성 구조를 재구조화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중심의 의사결정과 청소년과 지도자, 부모간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청소년육성 방향과 과제의 설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청소년육성 관련기구와 단체간의 연계관련망의 형성, 청소년육성 정책의 계획과 시행의 지방화 추구,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소수의견으로는 청소년 지도자의 권익신장과 전문가로서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나 청소년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 및 청소년육성 정책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육개혁과 동시에 고려하여 개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표 III-13> 청소년 육성분야 개선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

항 목	청소년 지도자	학계와 행정종사자	계 (순위)
청소년육성 구조(청소년 서비스 기관이나 기 구간의 관계)의 재구조화	212(1)	34(1)	246(1)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지도자의 전문성과 자율 성 및 의사결정 권한 증대	174(2)	26(4)	200(2)
청소년육성 현장에서의 지도자, 부모, 청소년 간의 인간관계 개선	168(3)	28(2)	196(3)
청소년육성 서비스 기구나 단체의 네트워크화 (연계관계의 형성)	102(4)	22(5)	124(4)
청소년육성 정책의 계획과 시행의 지방화 추구	88(5)	8(6)	96(5)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수요자(소비자:청소년과 부모) 중심으로의 전환	54(6)	28(2)	82(6)
청소년육성 현장에서의 부모 참여와 선택권의 확대	50(7)	6(7)	56(7)
청소년육성 서비스 공급자간의 시장원리에 의 한 자유경쟁 유도	16(8)	4(8)	20(8)

IV. 21세기 미래사회의 청소년육성 방향 모색

1.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조직원리 : 유사계몽적 패러다임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관점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학교교육과 육성제도 및 체계는 근대사회의 역사적 현상이며 근대국가에 의해 창출된 일종의 사회적 이념과 제도로 인식된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활동을 보장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등의 행위가 교육이나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간에 청소년을 위한 근대적 학교나 각종 육성기관은 근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확충되어온 각종의 다양한 기관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산업사회라는 일종의 문명사적 전개의 최종 단계에 확립되고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어 고도 산업사회에서 정착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육성 이념과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대사회에 있어 청소년육성 관련체계와 조직원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17세기 과학혁명과 학문의 발전 및 19세기초 인쇄기술의 발달과 고전을 중심으로 한 활자체의 보급,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기술의 혁신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프랑스혁명에 의한 자유·평등 원칙의 확립 등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나 기관의 형성을 필요로 했고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한 것이다(참조:金子照基, 1994:6-7). 첫째, 인쇄술의 급격한 발달로 문자의 해독능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기본자질을 갖추는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과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인쇄문화의 보급과 발전에 따른 근대사회에서의 정보화의 발전은 근대 학교제도의 확립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국제간의 생산성과 생산력의 총체로서 국력에 의한 국가간의 경쟁은 국력을 향상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교육의 체계적인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특히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국가구성원에 대한 국민교육은 국가변영의 기본조건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근대국가의 요구에 근거하여 근대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국가구성원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교수(가르치는 자 및 가르치는 행위)중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결국 근대적 국민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해독 능력을 중심으로한 일종의 근대적 계몽활동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읽고 쓰고 셈하기로 시작되는 근대적 지식과 기술로 계몽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복지향상이나 행복의 실현도 어렵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물론 근대교육과 육성이념이 전적으로 계몽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과 육성의 또다른 주체인 학습자로서 청소년의 학습욕구와 구조는 언제나 가르치는 행위중심의 계몽적 구조내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소년을 계몽하기 위한 교육과 육성구조는 강제(의무)적인 학교교육을 중핵으로 한 제도중심의 체제로 구현될 수 있었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는 증명으로서 학력(學歷)중심의 체제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이외의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의 장은 항상 탈교육적이거나 무교육적인 장소로 치부되거나 학교교육의 보조 내지는 들러리로 방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청소년의 정신에 지식이라는 문자가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근대사회의 청소년교육과 육성의 계몽적 패러다임의 가장 기본적 특징은 교수중심의 논리에 바탕은 둔 교수받는 장소로서 '학교'와 교수받은 형식적인 경력으로서 '학력'이라는 요소가 중심체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청소년을 가르치고 키우기 위한 체계와 구조는 근대사회의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문과 문화의 발전, 사회·경제의 확충과 국가의 부강(富強)을 위해 국민의 자질과 능력의 형성발달을 통해 지지될 수 있는 사회체도로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창출되고 조직·정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체도의 조직원리는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근대화의 주된 방향이었던 『민주화』와 『산업화』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조직원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적 원칙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에게 교육이나 각종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회는 신분이나 혈연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진다. 또한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조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조직의 합리적 운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가르치고 키우기 위한 근대적 기관과 조직들은 능력주의적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효율성에 기초한 조직의 합리화는 결국 가르치고 키우는 내용의 계통성과 체계적인 편집을 중시하고,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정도에 따라 단계적 구분을 명확히 하며, 동시에 청소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나 지도자의 전문성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또한 교사나 지도자의 전문성의 발휘를 위한 자율성의 부여는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나 지도자의 전문적 권위는 주로 근대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근대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주로 인쇄문자에 근거한 지식과 정보로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전수와 계몽의 대상자로서 청소년과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간의 차이에 근거한 성숙의 차이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근대사회의 지식과 정보는 인쇄문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한 전면적인 확산에는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나 지도자와 같은 전문직제는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에 근거한 지식과 정보를 주요한 전문적 권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간과 공간성의 차이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전문적 권위와 권력은 정보나 지식의 시간과 공간성의 초월, 즉 동시성이 확보되어짐에 따라 권위의 와해나 권력의 이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속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부 미래학자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는 권력의 이동은 정보혁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성의 확보에 기인하는 핵심적 변화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각종 기관이나, 이를 통한 교육이나 활동가회는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능력에 따라 선발된 제한된 인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제도나 조직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선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하나의 체계로서 그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선발제도로 운영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선발제도로써 조직은 각종 시험제도를 가장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제로 삼고 있다(참조:金子照基, 1994:2). 궁극적으로 근대사회의 청소년 육성체제는 인간의 문화유산을 활자문자의 형태로 계승·발전시켜 인간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교육체제이며, 조직원리로서 능력주의적 평등과 선발원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사회의 청소년 육성의 이념적 특성은 18세기 유럽에서 중세 이래 봉건적 전통과 신앙에 근거한 무지몽매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으로서, 개인의 자연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오성의 힘으로 편견이나 미신같은 타율적 지식을 타도하며 모든 것을 오성에 비추어 판단하려고 하는 합리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계몽사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신세계의 발견과 인쇄술의 보급 및 과학의 발달 등에 따라 인간이성의 보편적 성격과 인간의 무한한 완성가능성에 따른 사회의 진보관념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근대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관념과 체계를 ‘계몽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각종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한편 지식과 정보의 전수를 통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기대되었던 학교교육은 산업화의 후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효율성에 기초한 합리적 조직운영은 청소년의 소외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선발원리는 화석화되어 시험을 위한 각종 준비활동으로 청소년의 삶을 구속하고 질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근대사회의 중핵적인 사회제도로써 학교교육의 이러한 병리적 문제는 학교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마저 왜곡·변질시키는 한편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돕기 위한 보조기관과 조직의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즉, 경제적 빈곤상태에서 각종 범죄나 비행에 빠져들고 나아가 각종 교정기관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청소년의 집단이 누적되고, 이러한 청소년 문제상황과 행동의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각종 비행이나 범죄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복지적 노력들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활

말해지고 있다.

학교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학력을 평가준거로 청소년을 가르쳐 이성을 연마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몽적 패러다임’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학력중심의 학교교육의 병리적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육성 체제의 형성과 행태를 기형적으로 특성화시키고 있다. 학교교육의 병리적 현상은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청소년육성의 노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근세기말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만능적 사고와 문제인식은 교육행위와는 상호보완적인 또다른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체제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사회적 특별보호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어려운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의 병리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인간중심의 전인교육과 교육개혁조치(1980. 7.30;이른바 7.30조치)에 의거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한편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야영수련 등 집단생활을 통한 심신단련과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에 모아졌다(참조:이용교, 1994:34-39).

더우기 1990년대 들어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장기간의 청소년육성 계획을 수립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서 청소년육성을 청소년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기능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교육과 대등하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지만 별개의 기능을 하는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독자적인 정책체제와 구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참조:조영승, 1994:3).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체제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교교육의 강력한 지배력에 대한 회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문제상황은 교육만능적 사고의 팽배와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사회의 기피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청소년교육과 육성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하

고 믿는다. 즉, 교육은 청소년의 학업활동으로서 지식과 정보습득 및 기초적인 덕성·체력함양에 목표를 두고 청소년육성은 수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한 덕성과 체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 교육과 육성의 분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방법에 있어서도 교육은 학교중심의 교과과정에 의해 정해진 학습과목과 시간에 따라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청소년육성은 사회와 자연을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련활동에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별개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나아가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체제 형성 노력은 교육과 별개로 설정된 목표와 대상, 참여형태, 활동내용과 수단 및 지도자의 형태 등의 구조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원리와 형태를 시도한다. 우선 이들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궁극적인 육성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한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수단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크게 청소년 활동지원, 복지지원, 교류지원 등 3가지로 나누어,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되는 활동프로그램(교육=교과내용), 이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교육=교사), 활동을 매개하는 장소로서 단체나 시설(교육=학교 및 기타 부대시설)의 체계적인 완비를 육성의 조건으로 한다.

결국 청소년 육성체제의 독자적인 체계화 노력은 근대사회에서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띠고 있는 교육의 비인간적 관계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의 조직과 구조를 원용하여 육성내용의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계통성과 통합성의 확보,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 조직원리로서 효율적인 합리성을 성공적인 육성의 원리로 간주한다(참조:함병수외, 1991:87-89). 또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얼마나 많은 청소년 관련단체와 시설을 확보하느냐, 얼마나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환경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육성체제의 제도화를 승부의 관건으로 삼는다(참조:이용교, 1994:34-39). 학교교육과 대등한 구조를 가진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체제의 확립노력은 청소년 관련전문가 집단의 자기 존재확인과 기반의 유지확대를 위해 더욱 증폭

되고 지지될 소지도 없지 않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들이 제기하고 있는 육성체제의 합리적 효율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제나 현재의 청소년에 대한 공공적 또는 민간차원의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이 빈약하고, 자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나아가 민간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한다(이희연, 1995:13). 나아가 청소년 사업이나 복지지원의 전달체계의 미비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결여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며, 끊임없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유통구조의 제도화를 제기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학교교육은 물론 청소년단체나 관련기관들의 사업이 왜 지역사회의 감각을 상실하고, 관료주의적 행정과 전문직의 자기중심적 가치가 지배하게 되어 결국 청소년, 부모, 지도자, 지역주민간의 공동감각과 상응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여전히 국민적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의 전환 및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제도화할 수 없어 염려하며, 청소년과 부모들의 참여의식을 청소년 건전육성의 전제조건으로 호소하고 있다(참조:이용교, 1994:29-33). 결국 현재 한국사회에서 독자적인 청소년육성 구조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근대사회이후 학교교육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반복적으로 시도해온 체계와 조직의 합리적 효율화에 몰두하는 청소년육성의 『유사계몽적 패러다임』의 추구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계몽적 패러다임에 터한 청소년육성 정책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세계화 추진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정부 스스로 “1,337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지도자 양성·배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단체 육성 등 기존의 육성정책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전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여건하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현재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수련활동 여건조성과 지원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 체육, 사회교육, 복지분야의 시설·인력·프로그램 등과의 연계활용 및 민간단체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미흡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1995:2)”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진단이 학교교육의 강한 지배력과 병리현상에 문제의 근원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각종 기관이나 육성 네트워크간에 긴밀한 협조체제의 결여 등을 지적함으로써 미래사회가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육성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형성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은 실제 현장의 효과와 활동 내지는 청소년과 부모, 지역사회간의 인간관계 설정과 같은 현장중심의 실천과 관계에 대한 검토 보다는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기구의 성격에 따라 혹은 각종 관련 조직과 운영의 편의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어온 면이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2. 새로운 청소년육성 방향 모색 : 파트너십에 의한 육성패러다임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의 청소년 육성기구나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체험들은 청소년들이 집이나, 거리 또는 활동거점에서의 삶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육성지원 프로그램들은 ‘어른들과 함께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주체로서 보다는 미래의 사회주역으로서 또는 미래의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해주기를 바라는 특정 신조하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틀 속에서 짜여져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나치게 보호적인 것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각종 활동 프로그램과 경험들은 학교나 청소년단체나 시설 등의 교훈적 울타리 밖의 경험들과 상반되고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교훈적 활동현장의 가치와 철학들은 매우 공허하고 특이한 것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산업사회의 조직원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선 산업사회에서 기존의 조직과 질서는 비교적 안정을

그 특성으로 한다. 안정은 관료주의적 위계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관리자는 일차적으로 조직내부의 움직임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이러한 조직논리는 각 기구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호독립성을 강조하고 신장시키며, 따라서 조직은 폐쇄적 체제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의 사회조직 환경은 자유시장의 원리와 인적, 재정적 물리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적자생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기구나 기관들은 부족한 자원의 획득을 둘러싸고 그들간의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게 되며, 동반자적 관계는 우선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육성을 위한 노력과 대책 및 직접적인 서비스들이 상호 독립적이며, 분산되어 있고 부족한 인적, 재정적, 물리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사회의 조직환경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들이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사회조직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앞의 미래사회의 변화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시장의 형성과 함께 국제 무역시장에 있어 인력이동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 그리고 생존의 자유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며, 국제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지구촌의식의 공유를 필요로 하는 세계화(한준상, 1995:26)의 추세는 기존의 사회기구나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폐쇄적 체제로서의 조직은 역기능적이며, 보다 개방된 체제를 요구한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외적인 역학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참여와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 조직의 생존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s)에서 운용적 계획(operational plans)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은 명령적 상하구조에서 수평적 팀 조직위주의 구조로 전환하는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1) 청소년육성에 있어 파트너십의 개념과 의미

파트너십이 함유하고 있는 관계의 의미는 일정한 목표달성과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서 다른 인적 자원이나 기구, 조직과의 연계관계에 관한 것이다. 파트너십은 연계관계에서 협력이나 협조 등과는 구별되어진다. 협력이나 협조는 각각의 관계자나 기구들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에 의한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기구들은 새로운 관계구조의 틀 안으로 재통

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트너쉽은 관련자나 기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즉, 파트너쉽에 의한 재구조화는 더 많은 자원의 배분(greater sharing of resources), 보다 심도있는 공동기획(more intense joint planning) 및 힘과 권위의 분산을 전제한다(Kagan, 1991:1-3). 즉, 파트너쉽은 배분된 힘과 권위에 바탕을 둔 협동적 시도를 의미하며, 과도한 인적 자원에 대한 경비를 축소하고 청소년이라는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자원의 배분을 포함한 각종 자원의 공동배분과 분배과정에서의 경쟁기제를 도입한다.

결국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의 육성 패러다임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유효한가 하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삶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책임을 갖는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기구에게 각종 자원과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은 전달체계나 서비스 유통구조의 일종의 파괴를 의미하며, 청소년 활동거점을 중심으로한 서비스 현장 중심의 관계구조의 변화를 시도한다. 즉, 청소년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고 일차적인 청소년 성장과 보호기구인 가정과 부모의 권한과 역할을 재생시키려는 실질적인 전환노력이며 과정이다. 따라서 우선 부모에게 선택과 견제의 역할을 부여해 준다. 부모에게 선택권과 권한을 다시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 각종 육성지원 서비스들은 청소년을 교훈적이고 보호적 굴레 속에서 꼼짝 못하게 하고 단순히 청중으로 삼고 있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 청소년 육성 기구간의 힘의 균형에서 현재는 현저하게 학교나 육성기구 등 가정 밖의 기구에 힘이 부여되고 있었다. 부모는 현재 그들의 자녀에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육성정책과 서비스들이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획득과 참여의 여지를 거의 박탈당하고 있다. 부모는 청소년을 어떤 서비스기관에 보낼 것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떤 활동을 제공하고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어떤 가치가 강조되고 장려되고 있는가, 어떤 육성 목표가 지배적이며 어떤 목표가 경시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거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런데 자율성, 개성존중, 행위자의 만족성, 탈대중화와 주체성을 변화의 특성으로 하며 개인의 주체적인 활동과 참여가 강조되는 21세기 사회의 맥락에서는 더이상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선택을 배제하는 육성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마치 특정집단의 전제와 독점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의 분립을 실시하듯이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에서 개별적 주체로서 청소년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보다 부모의 선택과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의사결정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청소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차적인 육성책임자이며 관여자인 부모에게 실질적인 자원배분에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및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청소년육성에 있어 파트너쉽의 3차원

청소년육성에 있어 파트너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성인과의 관계 등 인간관계의 차원이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들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자원과 관련기구의 파트너쉽 차원이다. 셋째, 산업사회에서 청소년의 문맹과 기술훈련 및 도덕성 함양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병통치약적 기능으로 부각되었던 학교교육을 중핵으로 한 '교육기능'과 후기 산업사회에서 학교교육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기능을 병행하는 '육성기능'간의 관계 등 기능의 파트너쉽 차원이다.

첫째, 파트너쉽의 일차적인 차원은 청소년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즉, 파트너쉽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의 의미를 갖는다. 즉, 청소년의 삶에 있어 부모, 교사, 청소년의 육성을 전문적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나 지도자는 청소년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쉽의 관계구조는 첫째,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 둘째, 청소년과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단체, 시설, 교훈적 활동장의 교사, 전문가나 지도자와의

관계 셋째, 청소년의 일차적인 관여자이며 교육자인 부모와 교사, 전문가나 지도자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결국 파트너십에 의한 육성 패러다임은 부모, 교사, 전문가 또는 지도자와 같은 청소년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성인들과 동반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하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삶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 즉, 파트너십에 의한 육성 패러다임은 청소년의 의욕과 참여, 부모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반 역학관계를 새로운 인간관계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육성의 체제에 심기 위한 제도적 원리이다. 청소년 육성패러다임 개혁의 핵심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에 관련하고 있는 의미있는 관계자들간의 관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육성을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감각을 상실하고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식 지원 내지는 전문적 지도자나 관련자의 자기증식적 가치가 지배적이 되어 청소년, 부모, 지도자, 지역사회의 주민들간의 상호공존과 연계의 감각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구조 내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활동시간을 증대시키며, 관련지도자나 전문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시설이나 설비를 다량으로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고 개선하는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지 못한다.

일차적으로 파트너십에 의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과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동원가능한 자원과 권력 및 권위의 분배에 바탕을 둔 공동의 노력과 기획을 의미하는 관계구조를 갖는다. 우선 파트너십에 의한 육성에서는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 또는 충성스런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청소년의 현재의 삶이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준비단계로 유보될 수 없다. 현재의 청소년은 어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인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취해가는 주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대등한 정도의 권력³⁾의 배분, 참여와 흥미⁴⁾를 요구한다.

3) 이 경우 권력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자원을 요구하고 지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이익은 이런 의미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배분되도록 한다. 이러한 권력의 개념들에서는 어떤 권력이 청소년의 이익을 위한 자원을 요구할 수 있

따라서 각각의 의미있는 관계구조는 첫째, 청소년과 더불어 하는 부모 (parents with youth) 둘째, 부모와 함께 하는 전문가 또는 지도자 셋째, 각각의 다른 기구나 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가나 지도자와 함께 하는 전문가 또는 지도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

<표 IV-1>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의 특성 비교

	유사계몽적 패러다임	파트너쉽에 의한 패러다임
청소년관	미래의 주역 (장래의 일꾼, 시민)	현재의 삶과 복지 중심
권력구조	성인, 전문가 중심	청소년, 부모 중심
육성구조	육성기구나 기관중심	인간(청소년)중심
활동내용	계몽, 수련, 교육중심 공공이해와 이익 강조	서비스, 학습중심 개별적 이해와 이익 우선
서비스 형태	분산성, 중복, 불공평 교육, 육성기관에의 의존중심	통합성, 그물망적 지원 가정의 육성기능 강조
조직구조	안정성 명령중심조직 폐쇄적 조직 중앙집중적 형태 수직적 전달중심	복합성, 혼란성 팀중심조직 개방적 조직 탈중앙, 분산적 형태 수평적 네트워크중심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육성 관련기구나 자원을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향해 통합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간의

도록 해주는가, 또는 어떤 권력이 청소년들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 4) 참여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들의 최종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흥미는 청소년의 보호자나 대리자로서 성인집단의 흥미가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흥미와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파트너쉽으로서, 지역사회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민간기업이나 문화센타를 비롯하여, 각종 관공서, 공공시설 및 단체, 도서관 등의 다양한 시설과 인적 자원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의 공간 또는 자원으로 동원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연계망의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원의 파트너쉽으로서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자원통합은 <그림 IV-1>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자원을 청소년육성 서비스로의 통합적 모형은 우선 강제적(명령적) 서비스와 자발적(임의적)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강제적 서비스는 청소년들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띠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 자발적 서비스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 개설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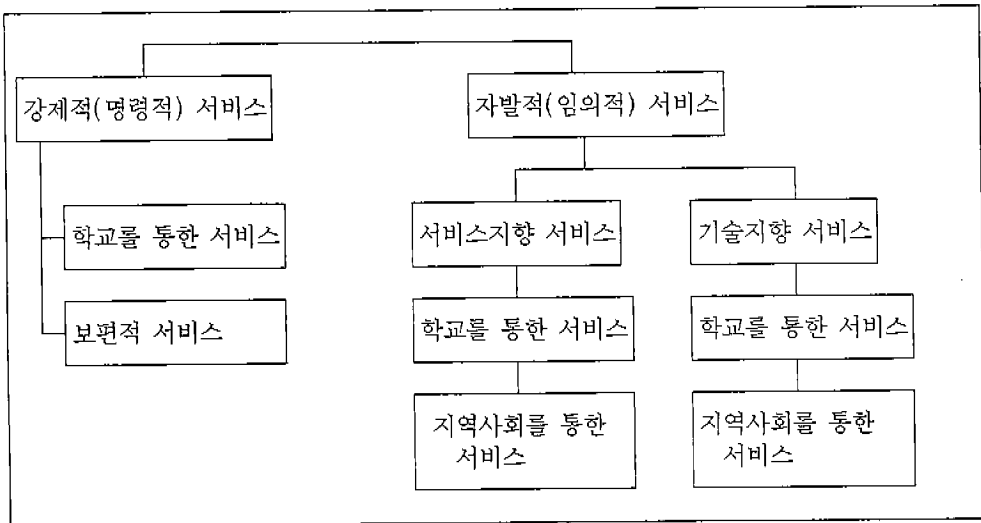
강제적 서비스는 다시 학교를 통한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를 통한 서비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한 일반적 학교교육의 역할을 포함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지역의 청소년회관이나 관련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공공기관으로서 공연시설, 박물관, 전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및 도서관 등과 더불어 소방서, 관청, 문예회관 등 각종 관공서를 통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일정 시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민간기업이나 시설 중에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시설들에서 청소년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주체의 임의성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교회, 사찰 등과 같은 종교시설이나 기업 및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관련 시설이나 사회교육 시설 등에서 주말과 같은 일정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개방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비스를 자발적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 및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강제적 서비스와 자발적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그물망적 서비스 체제의 마련이 지역사회자원차원의 파트너쉽

의 형성이다. 이 경우 자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적 자원배분 형태와 기회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1>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파트너쉽 모형



셋째, 기능차원의 파트너쉽으로서 청소년교육과 육성기능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앞의 미래사회 전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미래사회의 특성의 하나인 기술정보 혁명에 의한 지식사회의 도래는 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환기적 특성으로서 근대사회에서 강조되었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중요성 보다는 감성의 부활과 이성자체가 지닌 폭력성과 억압성을 배제하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시기에는 교육은 기존의 지성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가치와 자연환경의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즉, 산업사회에서 가졌던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이나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의 독점적 지위는 상실하게 된다. 교육은 학교밖의 다양한 사회교육 기관이나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기관들에게 개방되어질 전망이다. 학교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청소년들이나 일반 성인의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최저성과 기준을 정해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해 갈 것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기술 및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저성과를 목표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학습은 현재 육성기관으로 분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은 정보사회의 핵심인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감수성과 용기를 겸비한 창조적 인간으로 자라야 하며, 인간과 사회,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윤리적·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인으로서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열린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참조:청소년기본법 제 2조 기본이념).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사회는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미래사회에 창조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의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헌법에 청소년의 교육(헌법 제31조)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4항)를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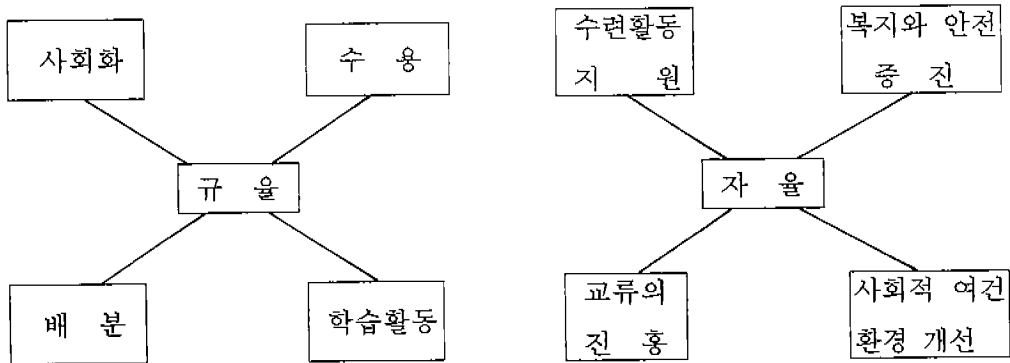
『청소년육성』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교육과 함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풍부한 지식과 감성과 용기를 지닌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진 『수레의 양바퀴』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청소년기본법 제3조 2호). 또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개념은 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 다른 학교 울타리 밖의 다양한 활동과 영역을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영역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한 인간으로서의 전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 지식과 덕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주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한 교육과 사회와 자연에서의 각종 수련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육성은 첫째, 사회와 자연환경을 무대로 한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둘째, 청소년의 복지와 안전의 증진 셋째,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지구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교류의 진흥 넷째,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바람직한 사회적 성장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선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참조:청소년기본법 제 3조 2호).

<그림 IV-2> 청소년육성과 청소년 교육의 기능 비교



<청소년교육의 기능>

<청소년육성의 기능>

청소년육성은 『교육법』을 중핵으로 여러 교육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를 주요한 활동의 장으로 하는 교육의 기능과는 별도의 기능으로서,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관계법령을 기초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교육과 상호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개혁 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신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수레바퀴인 육성 분야의 체제정비와 개선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본래의 소기 목적의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의 기본 원리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은 다수결원리와 소수파의 권리보장, 개인의 관심과 집단의 관심, 지역사회의 가치와 사회 전체의 가치, 전문가의 자율과 일반 공중에 대한 책임 등의 조정과 균형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듯이, 청소년육성에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분권화,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가, 각종 의사참여 기구와 서비스 기구, 부모, 청소년간의 권한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육성 개혁노력이 시장원리의 도입에 의한 경쟁위주의 개선이라면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의 도입에 의한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의 형성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지도자나 행정 및 서비스기관의 봉사자들에게 전문성과 자유로운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론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자율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파트너쉽에 의한 육성은 청소년육성에 있어 전문적 자율의 중요성은 명백하지만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적 활동이 일반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의 규명을 가장 절실한 과제로 삼는다. 만약 가정과 육성의 각종 사회적 기구간에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사회적 기구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자율을 강조하는 것은 전문가나 유사집단의 자기증식적 가치와 문화에 부모와 청소년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 자율의 전제와 전횡을 방지하고 육성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구나 위원회와 같은 특정집단이 직접 통제하려 한다면 육성체제는 산업사회의 조직들이 가지는 특성과 같이 패쇄적이고 경직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선택과 결정은 청소년육성 기구나 서비스의 전문성의 자율에 대한 책임을 묻고 평가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결국 청소년 요구에 진실로 부응하려는 의도에서 부모에게 다양한 활동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여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육성의 전문적 자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셈이다. 궁극적으

로 부모의 선택, 참여와 전문적 자율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이다. 즉, 부모의 선택과 참여는 자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요자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2) 청소년 활동과 서비스의 다양성의 원리

21세기 사회에서 청소년의 주체적인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가 지니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과 서비스의 다양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 권력의 분산, 다양한 가치의 공존, 고도의 분화된 직업적, 기술적 요구가 존재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매체에 대한 이용과 접근 가능성에 따른 계층화된 문화적 배경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의욕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제도적, 수행적 원리하에서 가능한 것인가.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표준화되고 공적인 권위에 의해 관리되는 유사계몽적 맥락하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다양화도 실질적으로는 소위 일원적 가치기준에 의한 다충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즉, 획일적 권위하에서 다양화가 계획되어진다면 그 기준이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능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이든간에 청소년의 가치와 위신의 서열화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청소년 활동과 서비스의 다양성은 결국 다양한 육성이념과 가치에 의한 서비스 현장의 지도자와 전문가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자율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모의 선택과 참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도입이 주요한 원리로 채택되어지는 것이다. 이때 선택과 참여라는 행위와 전문적 자율에 의한 다양성의 보장이 어우러져 전문가, 부모, 청소년에게 자신의 지역사회, 기구, 활동거점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애착이라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파트너쉽에 의한 청소년육성은 일종의 활동적인 부모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의 촉진운동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삶의 질의 개선은 청소년육성과 서비스 기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자들에 의해 참여(발언, voice), 선택

(choice), 애착(loyalty)이 어떻게 성공적인 육성체제의 모델과 청소년 활동거점을 향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육성체제와 기구 및 조직의 재구조화는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을 보다 청소년의 요구에 민감하고 시장의 지향성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즉, 청소년육성의 재구조화는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성기구(청소년시설, 단체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를 위해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총칭)의 문화, 조직적 가정, 리더쉽, 활동 프로그램, 지도 및 지원방법 및 책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문제(issue) 및 청소년의 요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활동거점이나 장소, 지원 및 육성기구의 가장 저변에서 실제로 청소년과 대면하며 지도하고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관한 권위와 권력을 배분하고 또 그들의 전문성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한다.

3) 청소년육성 체제의 재구조화의 원리

청소년육성 체제의 재구조화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 체제 자체의 변화의 원리이기도 하다. 청소년육성 체제의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참조:Reavis and Griffith, 1992:2)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 육성을 둘러싼 각종 자원, 조직,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및 지도, 인사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거점 중심적 의사결정(site-based decision making)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미래사회에서는 개성적인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이 서비스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기존의 표준화되어진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구조로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별적인 성장욕구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 내지는 청소년의 활동거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내지는 지도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청소년의 요구와 활동성

향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권한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육성 체제는 외적 규제에 익숙한 관료제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전문가에 의한 『분권화』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직화』의 2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현장과 거점에 적어도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화와 전문직화는 청소년육성 체제 재구조화의 관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 특히 부모의 참여와 선택에 바탕을 둔 시장지향적 접근으로의 변화(a shift to a market-driven orientation)가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청소년 전문가의 자율성과 결정권한의 확대가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준거라고 한다면 청소년과 부모의 참여와 선택권의 보장은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전문직에 대한 견제이며 권한이나 힘의 분산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육성 현장이나 기관에서 힘의 분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전문가의 자율성과 권한의 확대만을 고집하는 것은 전문가의 전제적 지배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요자인 청소년과 부모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과 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전문가의 전제적 지배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전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청소년과 부모의 참여와 선택권의 보장은 기관의 경영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다양한 상품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전문가의 자유로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참여를 의미한다. 청소년과 부모의 참여와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전문가의 자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일차적인 간섭자로서 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청소년육성 기구에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청소년육성 시설들에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서비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셋째, 기술공학적 도구와 정보매체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의 진작이 재구조화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정보혁명에 의해 평균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 개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일차적으로 청소년 육성기관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정보들이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부모들은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의 전문가들로부터 통합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과 문제해결 방안이 문제에 직접 부딪치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통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육성 서비스의 인간중심적 조직과 신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 특정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항상 기관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분산되어 제공되어 서비스 자체가 중복되거나 수요자가 특정 서비스를 찾아 헤매야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문제를 지닌 청소년과 부모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은 물론 문제나 사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개발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육성 기구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파트너쉽은 서비스의 통합과 질적 개선을 위한 육성체제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넷째, 청소년육성 체제의 재구조화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전제하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과학기술 위주의 발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소외와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자연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간성 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만약 미래사회의 고도 과학기술문명이 가져다 주는 기술을 인간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기술은 인간을 관리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기술은 인간의 개인적인 효율이나 책임으로부터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주지 못한다. 따라서 더 많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기술을 주도하려는 인간의 개인적 성장욕구도 커지게 마련이고, 그 개인적 성장욕구는 규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제 인간가치를 대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 즉, 핵전쟁과 환경 및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의한 인류공멸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인간존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간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선 청소년의 삶의 현장의 논리 및 형태와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이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청소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 그 서비스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청소년의 삶의 일부 분일 수 있으며, 그들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체험될 수 있는 자율성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사회에서는 앞의 전문가들의 진단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정의 경제, 사회적 사정과 지위는 높아지고, 넉넉하지만 일반 학교나 사회에 부적응하는 등 사회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않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풍요속에서 소비자(부모와 청소년)는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독특한 욕구와 필요를 추구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른바 ‘틈새서비스’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보사회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범람속에서 자아실현의 가치를 상실해가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들이 소규모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나 활동들에서 미처 예상할 수 없거나 그 결과로 파생될 수 있는 틈새를 포착하여 수요자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의 마련이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에 있어 책무성은 지도자, 청소년 분야의 행정가 및 학계 등 전문가 집단들이 그들의 실적과 활동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책무성은 육성노력의 효과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파생시켜주는 이유를 밝히고 설명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책무성은 감독자나 감독기관에 의한 것보다는 수요자에 의한 책무성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즉, 수요자가 강력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책무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요자에 의한 책무성은 자원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장중심의 권력과 권위의 배분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육성 체제의 재구조화에 있어 책무성의 반영은 재구조화의 핵심적 과제이다. 결국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 분야에서 책무성의 기제는 부모와 청소년의 선택에 의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와 현장지도자와 전문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파트너쉽 관계의 설정이 가장 주요한 관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구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경쟁적 관계 속에서의 자원배분 형태를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일 것이다.

V.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제¹⁾

이 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제는 앞에서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와 행정 종사자 및 학계의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델파이 조사결과의 분석에 터하여 우선 순위를 둔다. 즉, 청소년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과제들 중에서 묶을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개혁과 학교중심 활동의 탈피,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육성 분야에 있어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개선,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교류진흥 등의 5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개혁과 학교중심 청소년활동의 탈피

21세기 미래사회의 전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사회로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류문명의 어느 사회에서 보다도 부각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개념과 범위는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개념과 형태를 벗어날 것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제공되었던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정보매체의 획기적인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학습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지식중심의 교육활동은 학교 기관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송이나 정보매체에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분야에서 시도해왔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한 감성의 영역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 학교교육은 현재 학교 밖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지고 있는 감성의 영역을 어떻게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부문과 연계를 형성해갈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학교중심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

1) 이 장에서 제안되는 청소년육성의 주요 과제는 본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21세기의 주인공 우리청소년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설명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인용 또는 제안된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절은 천정웅박사와 황진구, 2절은 김혁진, 4절은 이용교 박사, 5절은 이영숙 박사 등과 도종수 부원장 및 전명기에 의해 총괄 작성되어진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의 교육은 그 자체로서 완성적일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의 육성적 기능과 수평적 연계 속에서 청소년을 과감하게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개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실질적인 학교교육 개혁과 학교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1 :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논의는 청소년육성과 교육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 육성 합동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분야의 다양한 체험기회가 통합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한 교육개혁 논의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육성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교육과 육성 합동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육성의 기능적 차원의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통로일 수도 있다.

미래사회에서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개혁은 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교육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기회부여를 통해 다양한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육성분야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교육과 육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과 육성활동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개혁이 시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명칭에서부터 교육과 육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혁위원회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단체활동을 포괄하는 육성분야의 통합적인 개혁기구의 설치가 필요로 한 시점이다.

제안 2 :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시설이나 사회 교육 기관의 연계를 맺고, 학교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파트너십에 의한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의 모색에서 기능적 차원의 파트너십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육성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역할과 범위는 확대되어질 것이며,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과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즉, 산업사회에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사회적 인식은 미래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에서도 한계가 있다. 즉,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학원, 수련원, 청소년회관, 공공시설 등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과 육성시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기관들의 질적 수준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교육시장이 외국에 개방되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내 청소년관련 시설들이 위기국면을 맞게 되고 아울러 외국문화의 국내침투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청소년에게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관련시설과 학교의 연계는 국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함으로써 부모나 청소년들에게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청소년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3 :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청소년 공공 수련시설이나 기구의 이용율을 높이고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권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 청소년과 부모들이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이나 기관 및 시·군·구민회관, 복지회관등 일반 공공시설로서 청소년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의 청소년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지역의 감각과 청소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부모와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다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공시설에서부터 부모와 지역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의 운영과 특히, 서비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서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 청소년시설의 지역사회 감각을 회복하고 청소년의 이용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의 예산과 결산, 프로그램의 선정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초빙이나 지도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기타 시설의 운영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심의, 의결, 자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과 부모 운영위원회가 공공시설에서부터 활성화되어지면, 민간시설에도 점차 확대시켜 민간시설의 육성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부여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 소유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안 4 :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시기를 조정하여 여름방학 기간을 늘리고 겨울방학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야외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경우 기후적인 조건에 따라 일년의 중반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겨울철에는 특화된 수련활동 외에는 수련활동 실시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편중현상은 90일간에 걸친 방학중 여름방학의 기간이 겨울방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데 기인한 면이 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중 90일간의 방학기간은 여름방학 약 5주, 겨울방학 6주, 봄방학 2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가하기에는 많은 시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학 일수는 외국의 경우보다 겨울방학의 기간이 약 3배정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겨울동안의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방학기간의 조정이 요청된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여름방학이 약 6주간으로서 겨울방학의 2주보다 3배나 더 긴 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여름방학 11주, 겨울방학이 1주로 여름방학의 기간이 겨울방학의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여름방학의 기간이 겨울방학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은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 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을 늘리고 겨울방학의 기간을 줄이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사회환경의 개선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새로운 정보매체의 발달로 파생되는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과거와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청소년들은 혼란스럽고 다양한 가치선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지도 기능은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 발달로 비롯되는 각종의 기술문명은 그 사용여하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위 유해환경적 요소를 급격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행화의 우려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육성에 장애요소로 등장한다.

유해환경의 증가는 결국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개선은 어른들 자신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의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제안 5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터」를 각 시·도 단위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과 모든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시와 고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 현재 청소년학회와 YWCA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해환경의 감시와 고발 운동이 수년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환경은 지역사회마다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유해환경 정화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보다는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구 지역을 단위로 「(지역)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 추진 방향

-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센터를 지정한다.
- 중앙단위에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센터를 지원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별로 1개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및 낭비 요인을 줄이고 지역내 유해환경 감시-고발-처리의 업무체제를 일원화한다.
-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의 유해환경 고발센터를 연결하는 시·도연합회를 조직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의 체제를 구축한다.

○ 단위별 센터의 기능

- 중앙단위 : 각종 자료의 제작 및 지역센터 보급, 감시단 운영자 교육, 고발 및 처리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지역단위 : 지역내 유해환경 실태 조사, 대책 연구 및 제안, 유해환경 감시단 구성 및 운영, 고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 정부의 지원방안

- 중앙 차원에서는 청소년육성 기금을 활용하여 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감시와 고발 사항을 통하여 제기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이를 입법화하여 그 성과를 가시화 한다. 특히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성과가 법적으로 또는 행정·사법적으로 가시화되고 실제적인 제재가 이루어

저야 한다.

- 고발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당국은 지역내 관련행정기관, 사법기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유해환경 고발센터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제안 6 :

각 시·도 단위로 「청소년 유해환경 심의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소년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는 없지만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종 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유해환경 분야가 날로 증가하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법적·제도적인 제재 장치가 미흡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해환경의 범위,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유해환경을 지정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중앙에는 청소년 분야와 유해환경의 각 유형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 위원회 조직은 중앙 청소년 유해환경 심의판정위원회를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같은 민간 육성 중추기구내에 설치한다. 지방에서는 광역단체별로 지방청소년 유해환경 심의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중앙 및 지방 위원회는 전체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로 조직을 구성한다.

- (중앙)청소년 유해환경 심의판정위원회 : 유해환경의 범위, 지정절차, 법적 제재 등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개발하고 지방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 (지방)청소년 유해환경 심의위원회 : 각 시·도에서 지방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심의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 자문기구 형태가 아닌 심의 및 지정권을 가진 기구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관계된 행정·사법기관의 유해환경 관련 업무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 유해환경 심의권 : 청소년들과 관련된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결과 유해하다고 결정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하며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유해환경 지정권 :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유해성의 정도가 심하여 청소년들의 접촉이 금지되어야 할 유해한 업소, 영상물, 인쇄물 등에 대해 유해환경으로 지정한다. 유해환경으로 지정된 경우 업소의 운영, 유해물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구속 등 행정·사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 유해환경 심의와 지정절차 및 방법
 - 심의대상 선정 : 심의위원회의 자체적인 선정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관계기관, 일반인의 심의 요청에 따라 심의대상을 정한다.
 - 심의후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심의결과 경미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해당사항을 시정조치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유해환경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한다.
 - 시·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환경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 유해환경 지정의 방법으로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심의 후 지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포괄지정제 및 긴급지정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 포괄지정제란 영상 및 인쇄물의 내용중 지나친 음란행위가 묘사된 사진, 그림이 전체의 1/2 또는 1/3 이상일 경우 일정한 법령기준에 따라

- 자동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유해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제작자 및 판매자가 스스로 유해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포괄지정을 어기고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받도록 한다
- 긴급지정제란 새롭게 등장한 또는 급속하게 번져가는 유해환경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다. 즉 긴급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분과실무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전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유해환경으로 지정케 한다. 그리고 이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공시하며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안 7 :

각종 방송이나 TV프로그램의 음란성이나 폭력성을 규제하기 위한 ‘V칩’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TV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폭력, 음란장면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음란한 장면들은 청소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폭력과 음란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성이 있는 장면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심사보다는 주로 방송이 된 사후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장면들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극장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고 비디오 테이프도 성인용으로 분류된 영화가 TV를 통하여 방송되고 있어 ‘청소년용’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폭력 및 음란장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V”칩과 같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살인, 강도, 성적인 묘사의 방영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V”칩이란 TV에 특수 칩을 달아서 폭력물로 분류된 영화는 자동적으로

로 화면이 만나오게 하는 장치이다. 이 방법은 청소년들을 폭력과 음란 장면으로부터 차단시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성인용과 청소년용의 프로그램 구분과 시청에 대한 물리적인 차단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언론에 대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연구보고, 시민들의 의견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을 폭력과 음란 장면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면 V칩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법령에 V칩 의무조항을 신설한다.

- 방송심의위원회 또는 공연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기존의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는 TV방송심의위원회에 청소년방송심의 기능을 추가한다.
- 위원회에서는 관련위원회의 자료 및 자체적인 심의를 통하여 성인용, 청소년용 등의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방송사로 통보한다. 방송사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등급정보를 삽입하여 시청자가 TV 시청시 지정한 등급에 따라 그 이하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 V칩 도입을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새로 생산되는 TV수상기에 이 장치를 부착할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 참고사례

미국에서는 상원 및 하원에서 V칩의 도입이 법률로 통과되었다. 현재 찬반 양론이 대립된 상태이지만 법안통과에 따라서 V칩이 부착된 TV수상기가 판매될 경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안 8 :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거리」를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공간에 대한 주요 정책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유해업소나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출입구 통제’ 방식을 채택하는 등 부정적 제재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중심의 공간제공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편의시설, 학습시설, 오락시설 등)과 거리가 멀 경우 청소년의 이용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많은 유해업소가 몰려 있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통제 지역으로 설정하여도 실제로 많은 수의 단속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개념으로 공간개념을 확대하고 출입금지 지역의 선정과 더불어 출입 권장지역을 제공하는 긍정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각종 취미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정방법과 운영형태

- ‘청소년의 거리’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요 도시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지역을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한다.
- 지역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한 신청을 통하여 지정한다.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각종 문화, 편의 시설이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도심의 변화가가 주요 대상이 된다.
- 지역주민과 청소년 대표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거리’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협의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 이를 위해서 청소년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며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행사 프로그램의 개최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 이는 거리로 지정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 청소년거리에서 일부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는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 거리의 문화가 지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나 청소년 스스로의 건전문화를 조성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청소년 전용시설이나 공간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이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시설이나 공간자체가 현재의 청소년문화와 동떨어져 있었던 데에도 있지만, 일부 문제청소년들에 의해 전용시설이나 공간이 선점되어지는 상황에도 커다란 이유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소년거리의 문화가 일부 문제청소년들에 의해 지배되거나 선점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 시설유치 및 지원

- 시설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욕구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한다.
- 우선 이 지역내에 수련시설(수련관 또는 수련실)을 설치하여 운영위원회의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 각종 실내외 문화공간(공연장, 극장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되, 이 시설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 또한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청소년 카페'를 설치·운영한다. 기존의 패스트푸드점과 견줄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화의 공간, 소규모의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정보와 상담공간을 제공한다.
- 건전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스포츠 시설, 편의점, 서점, 문구점 등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은 이곳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각종 청소년 관련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청소년용으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치 비용을 청소년 육성기금 및 각종 민간재원 유치를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3. 청소년육성에 대한 재정지원과 배분형태의 개선

제안 9 :

청소년육성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중 국가주도의 서비스 지원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로 재원의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배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관련예산은 301억원으로서 199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대폭 증액되긴 하였으나(1992년: 249억원, 1993년: 223억원, 1994년 162억원)나 아직까지도 국가 전체예산의 0.1%에도 못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육성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1인당 투자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5천 7백원(서울)으로, 영국(10만 7천 9백원: 런던), 프랑스(8만 5천원: 파리), 일본(4만5천원) 등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1992년부터 10년 예정으로 기획되었던 「청소년기본계획」이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각종 사업추진 및 시설투자에 많은 차질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고배정시 청소년육성 부문의 우선 배려를 위한 정부 및 대국민 홍보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육성 부문은 국고배정의 우선 순위에서 교육 등 유사부문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육성이 우리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정책당국 및 국민일반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고예산 배정시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 관련예산이 GNP의 5% 수준으로 확대되듯이 청소년육성 부문의 예산도 GNP대비로 환산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점차적인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관련예산의 증대에 청소년육성 부문의 예산을 포함하여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재정부문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 단체나 시설의 운영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는 국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재원의 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연초에 해당 년도에 청소년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각 민간단체나 시설 및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구 등에 대해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와 예산서를 공모받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등 경쟁적 기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청소년 복지의 증진

헌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199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한 바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여전히 유보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권리보장은 매우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가족이나 일부 교사 또는 동료들로부터 학대받는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기구가 절실하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별도의 ‘청소년복지법’이 없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다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미래사회에는 가족의 핵가족화, 이혼과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이탈되거나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 즉,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향상시키고 각종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의 전통이 있어서, 가족관계에서는 친권이 청소년의 권리에 우선하고, 사회에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각종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당사국에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반 규정은 신속히 개편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곳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대받는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서비스와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의 설치

는 매우 시급하다.

제안 10 :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시·도 청소년상담실에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에 매를 맞은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전체 청소년중에서 교사로부터 97.3%, 부모로부터 89.6%, 교내학생으로부터 35.8%, 불량배로부터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난 일년동안에 접수받은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1,356건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51.2%, 14-19세의 청소년이 17.6%,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28.7%로 전체의 46.3%의 피해자가 청소년과 아동임을 알 수 있다. 일반 강간과 성추행은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전체의 62.9%이다. 부모, 친척, 오빠 등 매우 가까운 곳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자 혹은 지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성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금지 행위를 위반한 보호자를 조사만 할 수 있고, 학대받은 아동을 강제로 격리·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대받은 아동의 신변보호가 사실상 어렵다.

성적인 학대인 경우는 199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로 인하여 과거보다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증을 요구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성적 모독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출두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학대받은 아동(18세미만의 경우)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상담소의

2) 김혜숙·송중용(1994),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p. 25.

3)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4주년 기념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p. 6.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 시도에 있는 공립 아동상담소(13개 소)는 기아, 미아, 부랑아를 단속하거나 초기상담을 받아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수용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위기상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기상담은 절실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학대에 대한 긴급신고체제 수립 및 학대받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조력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력체제에서는 24시간 청소년 위기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과 변호, 의료적 치료, 그리고 일시보호, 부모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안 11 :

미래사회에서는 풍요로운 개인의 삶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각종 정보획득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각종 체험활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1)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각종 수련활동 지원

과거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시설보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및 무직청소년에게 정부의 지원으로 수련활동 기회를 주어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제46조 제2항)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공부방 확충’ 사업을 제외하면 소액의 예산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본 취지가 학업에 얹매인 청소년에게 대자연과 사회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에 비교할 때 어려운 청소년

을 위한 수련활동이 크게 경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지원중 대표적인 것은 ‘자연체험활동 기회제공’인데 1994년 한해동안 4,060명(2박 3일)이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수치는 어려운 청소년의 수(교육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25만여명)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최근까지 편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사업은 ‘모자가정’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되고,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없었다. 사회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같은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부자가정에게도 실시하고 수련활동에서도 가족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수련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내용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수련활동의 기회를 일년에 한차례 하는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여서, 수련활동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혀야 한다.
- 수련활동의 지원은 공공수련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청소년 중 어려운 청소년이 약 5%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용자의 5%를 어려운 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에게 할당하도록 한다.
- 수련활동의 지원내용을 자연체험 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문화권탐방활동, 도시 농촌 교환방문활동, 역사연극활동, 호연활동 등 대자연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련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련거리에도 기회를 준다. 이 경우에도 보통의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편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수련활동도 개발한다. 부모와 함께 하는 수련거리에는 효과적인 대화법, 부모-자녀 역할연기, 부모의 청소년기 발표회, 청소년의 20년후 모습(성인기) 발표회, 함께 식사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 체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모자가정보다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안되고, 가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훈련, 요리하기, 시장보기, 집안꾸미기 등 가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보다 절실하다.
- 프랑스에서는 여름휴가철에 바캉스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휴

가코로니'를 실시하고 있다. 1881년부터 시작되어 본래는 가난하고 허약한 아이들을 위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제2차 대전후부터는 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휴가코로니의 보급과 이용이 장려됨으로써 학교에 의한 이용과 일반가정의 이용이 증대되었다. 전국조직으로서는 '프랑스 휴가코로니연맹', '프랑스휴가코로니연합회', '가족휴가코로니연합회', '공립학교학생협회연합회' 등이 있어 이 사업의 추진이나 연결 조정을 맡고 있다. 휴가코로니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여가 지도자 양성센터' 등의 기관이 지도자의 양성과 연수를 맡고 있다. 휴가코로니가 주축이 되어 학교교사,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을 바캉스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농촌지역에 산재한 옛성, 교회나 성당, 문화유적지 등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모금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름휴가철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국민학교(혹은 폐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수련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복지 시설의 법제화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 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주된 복지사업은,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아동상담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육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은 극히 일부만 보호를 받았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등에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서울YMCA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4.3%는 가출한 경험이 있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중 23.8%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18세미만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서울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 상담, 이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의 시설만으로는 전체 가출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유흥업소 주변을 맴돌다가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돌아갈 집이 없는 결손(해체)가정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위해서 종교기관에서 ‘나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고, 청소년 복지시설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등 독립세대 형성의 추세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시급한 실정이다.

◦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의 법제화

현재, 청소년 보호시설은 가출청소년을 일시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청소년 쉼터), 3-6개월정도 단기간 보호하는 시설(청소년쉼터), 1년이상 장기간 보호하는 장기보호시설(나눔의 집) 등이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의 확립

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법 제3조)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실 등을 법제화하고, 학대받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청소년을 위한 치료시설 등을 포함해서 법으로 지원한다.

◦ 청소년 복지법인 등록요건 완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법인 등록요건을 완화시켜서 소규모 ‘나눔의 집’ 등 집단가정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이 분산된 경우에는 대표시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설보호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쉼터’와 ‘나눔의 집’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⁴⁾.

① 일시보호시설(서울YMCA 청소년쉼터)

가정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주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사업

- 일시보호 서비스 : 무료숙식제공, 의료서비스, 교통비 지급 등
- 가출상담 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심리검사, 의뢰활동, 사후지도
- 교육문화 활동 : 영화감상, 시청각 교육, 공동체놀이, 견학관람, 특별활동 등

- 가출예방 사업

- 일반상담 사업 : 면접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 교육훈련 사업 : 청소년 위탁교육, 또래상담자 교육, 캠프,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실습생 교육
- 연구조사 사업 :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청소년 문제, 문화, 환경,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 홍보출판 사업 : 언론매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에 서신 및 방문 홍보활동, 캠페인, 사업보고서, 연구조사자료집, 사례집 등

② 단기보호시설(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빈곤지역 청소년들이 부모의 상습적인 구타나 방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

4) 서울YMCA 청소년쉼터,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995, pp. 112-117.

으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 보호활동

- 보호대상 : 결손가정 청소년, 가정내 폭력, 유기방임으로 가출한 청소년
- 보호연령 : 국민학교 4학년~중학생, 소녀
- 보호기간 : 3~6개월 단기보호
- 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종교활동, 공부방활동

- 상담활동

- 상담대상 : 가정내 학대, 가출, 이성,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청소년, 청소년 문제와 관련있는 부모와 가족, 교사 등
- 상담종류 : 전화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

- 교육문화활동

- 청소년 열린 교실 : 중학생 또래집단에 대한 인간관계훈련

③ 장기보호시설(살레시오 나눔의 집)

갈 곳 없는 청소년,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의 집’으로써 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 보호활동

- 보호대상 : 결손 가정청소년이나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
- 보호방법 : 한 가정에 1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상주하는 자원 봉사자 1-2명과 가정 분위기로 삶
- 보호기간 : 제한 없음, 자립능력이 있을 때 퇴소
- 프로그램 : 일반 정규과정의 학교교육, 중고등학교를 마치면 기술학교 입학

- 시설운영

- 1985년 철산동에 나눔의 집을 최초로 설립
- 현재 서울과 인근지역에 8개소에서 100여명이 살고 있음

제안 12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의 청소년 선도위원, 법무부의 청소년 보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위원들의 활동이 미미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유흥업소 주변 등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단속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등이 책임감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과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 중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정형량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를 먼저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소년범죄자 119,405명중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소년은 불과 2.2%에 불과하지만, 소년원에 보호처분되지 않은 소년들도 경찰에 체포되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까지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려 학업을 중단하게 되므로 신속한 선도로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줄여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사건 처리(1993)

구 분	인원		
소년범죄자 수	119,405명	전체범죄 대비	6.4%
소년보호사건처리인원	27,824명	소년범 대비	23.3%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인원	16,717명	보호사건 대비	60.1%
소년원 송치인원	2,652명	소년범 대비	2.2%
		보호사건 대비	9.5%
		분류심사 대비	15.9%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도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 되었고, 시행령 제24조 3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역단위 활성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지역단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권 수련시설에 지도위원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지도위원이 연중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방과후, 주말, 중간-기말시험직후, 입학시험 전후, 방학, 연말연시 등 청소년의 학교외 활동이 활발할 때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강화한다.

○ 청소년 지도사 지도위원 위촉

청소년 지도사를 선임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지도사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지도위원의 선도기능 강화

일정형량 미만(보호관찰 처분정도)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지 않고, 소년의 거주지역의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보호하도록 하고, 선도가 되면 범죄기록 자체를 말소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제안 13 :

미래사회에서 주요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 약물센터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약물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에게 까지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에게만 적당량 사용해야 할 약품과 생활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들이 청소년들에게 환각제 대용으로 남용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이내에 남녀 고등학생들이 사용한 경험에 있는 약물들을 보면, 법적 제재가 없거나 미약한 술과 담배는 각각 40.6%, 20.5%이고, 사용경험율이 약간 높았던 약물은 각성제(2.8%), 수면제(2.4%) 등이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가스(0.8%)나 본드(0.7%)를 흡입하거나 대마초나 마약을 남용한 경우도 각각 0.3%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유해한 물품 및 매체의 사용과 시설의 이용은 습관화되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중독된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청소년 약물센터 설치 및 치료센터 지정

5) 최경구 외,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 경제적 영향 연구, 문화체육부, 1994, pp. 14-17.

청소년 약물센터는 시·도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되거나 관련 전문의가 있는 공공병원(정신병원)을 치료센터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 약물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치료 프로그램 : 자기표현치료, 학습치료, 자기탐구치료, 싸이코 드라마, 명상의 시간치료, 특별활동치료, 사회적응 치료, 어머니교실, 레크레이션 치료
- 특별교육 치료 : 정신건강 전문과정, 정신건강 이해과정
- 특별기획 프로그램 : 가족치료캠프, 친구상담훈련 캠프, 청소년 대인 관계 훈련, 예비부모교실, 사춘기 자녀교육교실, 청소년 성교육 교실, 정신건강을 위한 임상예술 체험, 퇴원환자 사회적응 훈련

※ 참고자료

▶ 내년부터 국교 5, 6학년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신체검사 때 부탄가스/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의 약물반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이들의 교과서에는 약물남용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실리게 되고 수업시간에 약물관련 정규교육이 실시된다.

▶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약물남용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총리실은 10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약물남용 대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안의 핵심은 약물반응 검사제 도입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드·부탄가스·신경안정제 복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관별해 줄 이 반응검사에서 상습복용 청소년들은 양성반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본드·부탄가스등의 상습 흡입시 사용 1주일후까지 잔류약물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약물검사제 도입은 현재 소지품 검사로 적발·처벌만 하는 방법을 탈피, 초기단계에서의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물반응 검사는 96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의 초·중고별로 일정수의 학교를 선정, 시범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이와 함께 현재 중·고교 체육과목에 원론적 소개에 그친 약물남용 폐해내용이 국교의 경우 96년 교과서 개편부터 반영돼 1997년부터 국교 5, 6년생

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이 실시된다. 중·고교는 차기(1996~2001) 교육과정 개편 때 단계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교 6년간을 통틀어 6시간에 불과했던 현재의 약물교육이 연중 반복교육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양호, 체육교사가 담당해왔던 자체교육에 마약퇴치 운동본부·지역약사회 등에 의한 특별순회교육을 추가,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청소년 약물중독자들의 치료 재활만을 전담할 200병상규모의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를 1997년에 착공 건립키로 했다. 지난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8.6%, 고교생의 16.2%, 소년범죄자의 64%가 약물사용경험이 있고 약물종류는 신경안정제 5.1%, 부탄가스 4%, 본드 3.9%, 대마초·히로뽕·마약 2.0%로 나타났다⁶⁾.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약물 및 가스, 본드 흡입 등에 빠진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한 상담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는 2000년까지 주요 도시에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을 상담 계도할 기관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 부산, 인천, 전주, 춘천, 원주, 강릉 등 7개소에 운영중인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문인력을 보충,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997년까지 이들 7개 상담소에 전문인력의 배치는 물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상담소를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⁷⁾.

제안 14 :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세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6) 중앙일보, 1995. 10. 19 기사.

7) 문화일보, 1995. 10. 26 기사.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적절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유흥업소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업소나 서비스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경향은 미래사회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 직업훈련원은 6개월 이상에서 3년까지 장기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교육기간이 길고, 수용능력의 한계로 입학을 희망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 높은 경쟁률로 말미암아, 직업훈련생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 성취능력이 다소 떨어진 많은 중퇴 청소년은 공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단기 직업훈련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학습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종으로 단기간에 직업훈련을 시킨다. 오랜 기간의 숙련이 요청되는 자동차정비, 목공과 같은 기능 보다는 중퇴한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하고 있는 음식숙박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인정직업훈련원(130여개소)을 늘려서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

◦ 직업알선과 자립 지원

직업훈련 후에는 직업알선과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직업훈련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졸업후 사후지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서 기술을 익힌 청소년들이 동일직종이나 유사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 사업을 병행한다. 직업알선은 관련 협회와 연계해서 구인과 구직자를 알선하도록 한다.

※ 참고자료

▶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직업기회 제공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비행청소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상담, 직업훈련, 금전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JOBS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의 경영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활동으로 100만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하절기근무와 파트타임을 제공하였다.

▶ 그중 하나로 지역사회소년단(Neighborhood Youth Corps: NYC)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소년단은 노동부의 인력관리부서에서 지원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16-21세의 청소년들에게 유급노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사회소년단의 주된 활동은 교외활동, 교내활동, 하계활동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외활동(out-of-school program)은 저소득층의 고등학교 중퇴생들에게 유급 노동경험을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교외활동의 목적은 대상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GED)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숙련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미숙련 또는 반숙련의 직업기회를 알선해준다. 이러한 교외활동의 대상자는 90%이상이 17-18세의 청소년들이고, 교육기간은 확실한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 교내활동(in-school program)은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파트타임 근무경험과 소득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하여 보충교육, 기술개발, 상담,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 하계활동(summer program)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근무경험과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5. 청소년 교류의 진흥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힘으로써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국가간 상호이해 및 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구분 없이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다양성을 통해 하나됨을 깨닫고 민족애를 고취하도록 지역혼합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통일조국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념체제 아래서 이질화된 남북한 청소년간의 생활과 문화를 동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재외 한민족청소년과 우리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청소년육성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제안 15 :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청소년 마을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에 배낭여행, 어학연수등으로 국제교류를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성인보호자 없이 국외여행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중학생의 85.5%, 고등학생의 92.4%가 국외여행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인적, 문화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시책들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우는 국제교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마을”을 정부가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시설은 현재 강원도 평창에 건립중인 한국청소년마을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수의 우리청소년에게 국외여행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각국의 문물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청소년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국제교류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외국청소년도 참가하여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함으로써 국제청소년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류와

우의를 증진한다. 교류 대상국을 연차별로 아시아권, 유럽권, 동구권, 북남미권, 아프리카권으로 확대하고, 참가인원도 매년 점차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교류 센터”를 2000년까지 신설하여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안 16 :

국내 청소년들의 지역교류와 상호 이해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서 예견되는 지방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팔도청소년 어울마당 등과 같은 지역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세계감각의 고양도 주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국내의 타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커다란 병폐인 지역감정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지역간 대립에 따른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간 교류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학여행 기간 중의 짧은 시간 방문외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태도와 정신을 함양할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각 시·도의 경계지점에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구분없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팔도청소년 어울마당”을 기획·개최할 수 있다. 팔도라는 말은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므로 도계지역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이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문자 그대로 함께 어울려 하는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도의 경계지점은 양도의 문화가 혼재하므로 다양한 문화와 접하기 용이한 지역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만나는 화개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만나는 문경새재와 같은 도계지점을 청소년 수련시설 장소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토록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된 청소년들이 함께 수련활동을 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친선과 우의증진으로 형제애와 자매애를 체득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내고장의 전통문화를 미리 익혀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과 교류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90),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언”, 한국청소년연구 1990년 겨울
- 강만길(1994), “국제화시대와 민족문화”, 철학과 현실 1994년 여름호
- 강명구(1994), “국제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호
- 강무섭외(1987),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연구보고 RR 87-30, 교육개발원
- 강문규(1984), “변화속에 내재된 가치 파악해서 그에 따른 지도이념 세워야; 사회변화와 청소년지도”, 한국YWCA
- 고성국(199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포럼21, 제9집, 한백연구재단
- 공성진(1990), “21세기 세계환경의 추이와 한국의 선택”, 포럼21, 제1집, 한백연구재단
- 공성진(1994), “문명충돌론의 지성사적 함의”, 포럼21, 제9집, 한백연구재단
- 교육개혁위원회(1994),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1차대통령보고자료,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김근태(1994), “내가 생각하는 국제화 세계화 토론”,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호
- 김문환(1994), “한국문화의 국제화전략”, 철학과 현실 1994년 봄호.
- 김병국, 김경원·임현진 공편(1995), “지역주의”,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서울: 나남
- 김상헌편저(1994), 세계석학 10인에게 듣는 21세기 새물결, 서울: 고려미디어
- 김여수(1994), “서구화,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 철학과 현실 1994년 봄호
- 김영모외(1988),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체육부
- 김영춘·김성배(1994) “최근의 국제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연구논총 3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 김인회(1994), “21세기 한국교육의 청사진”, 도산학술논총 제4집,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 김종욱(1994), “세계화와 지역이해”, 세계화, 시민의식, 시민교육, 1994년도 시민교육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12.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사회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 김현청(1994), “교육개방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 UR협상의 영향과 교육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1994.4.22
- 김혜숙(1994),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경쟁논리” 철학과 현실 1994년 여름호
- 김호진·김정열(1994),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비전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통일”, 고려대노동문제논집 제11집
- 노성현(1993), “정보화와 국가전략”, 포럼21, 제8집, 한백연구재단
- 대통령자문 21세위원회(1994), 한국문화와 국제화, 21세기정책자료 94-2
- 도종수외(1994), 삼성복지재단 청소년사업의 비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화체육부(1995),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 세계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연찬회 자료, 서울: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1995), 『바른 청소년육성 운동』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1995.5.
- 박준희(1988), “국제화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구조변화”, 청협 12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배규한(1990),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모색”, 포럼21, 제1집, 한백연구재단
- 배규한(1995), “미래의 틀로 본 세기말의 한국사회”, 세기말의 한국사회, 사단법인 21세기모임·조선일보 세미나
- 신섭중(1988), “국제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와 지도 대책”, 청협 12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신윤창(1994), “국제화와 복지국가의 모형에 관한 연구 이론적 고찰”, 고려대노동문제논집 제11집
- 양호환(1994),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육”, 세계화, 시민의식, 시민교육, 1994년도 시민교육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12.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사회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 어수봉(1994), “국제화와 직업교육: 신인력정책을 중심으로”, 포럼21, 제9집, 한백연구재단
- 어윤배(1994), “국제화와 한국청소년 육성방안”, 국제화와 한국청소년육성방안,

- 서울특별시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주최 제24회 청소년건전육성 정책토론회 기조강연 논문, 1994.5.26
- 엄정식(1994), “개방화시대의 대학생과 민족적 자아의 정립”,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혁신, 1994년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5.28
- 이광호(1994), “패러다임 변혁기 교육개방의 역사적 교훈:개항기 교육개혁에 대한 비교교육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연세교육학연구, 제8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상주(1988), “국제화시대의 청소년정책과 그 방향”, 국제화시대의 청소년정책과 그 방향, 한국청소년연맹 주최 제6회 청소년세미나 기조강연 논문, 1988.10.26
- 이용교(1994), “새로운 청소년육성운동의 모색”, 오늘의 청소년, 제10권 제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이용교(1994),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구(1990), “90년대 청소년의 세계와 한국의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3호, 1990년 겨울호
- 이은숙(1993), “리엔지리어링의 세계”, 포럼21, 제8집, 한백연구재단
- 이중환(1988), “국제화 시대의 청소년문화론”, 청협 12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이중환(1989), “오늘의 청소년 문화와 지도대책;청소년문화의 과제와 질적 향상방안”, 청협 13권 3호
- 이태원(1994), “지방화와 청소년”, 국제화와 지방화에 따른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주최 제3차 청소년정책토론회 주제발표논문, 1994.10.31
- 이희연(1995),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간담회 연구결과”, 청소년을 돕는 사회적 지지망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995.5.26. 서울YMCA 쉼터.
- 장성만(1993),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세계의 문학 통권69호, 민음사

- 정범모(1988), “21세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청협 12권 2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정영국(1990), “미래예측과 델파이방법”, 포럼21, 제1집, 한백연구재단
- 정원식(1987), “21세기를 담당할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최, 제19회 청소년문제연구 세미나 자료, 1987.9.23.
- 정 철(1991), “정보화사회의 구조적 특질”, 포럼21, 제2집, 한백연구재단
- 정현우 역음(1993), 이건희 신사고 신경영, 서울: 자유시대사
- 조영달(1994), “세계화와 한국사회 공동체의 과제: ‘세계화 간접자본’으로서의 공동체 시민의식 형성” 세계화, 시민의식, 시민교육, 1994년도 시민교육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12.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사회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 조영승(1994), “청소년육성의 이념-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육성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4 1급 청소년지도사과정 연수교재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유식(1994), “국제화시대에 유행하는 경쟁전략들”,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호
- 차경수(1994), “세계화와 시민의식”, 세계화, 시민의식, 시민교육, 1994년도 시민교육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4.12.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사회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 체육부(1989), 청소년대책의 어제와 오늘: 청소년국 창설 1주년, 서울: 체육부
- 최운실(1994), “국제화와 청소년”, 국제화와 지방화에 따른 청소년문제,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주최 제3차 청소년정책토론회 주제발표논문, 1994.10.31
- 최운실외(1991),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책연구, 연구보고 RR 9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출처미상(1995), 대통령의 세계화구상, 1995.2
- 표학길(1994), “국제화 논의의 역사성과 이론적 기초”, 현상과 인식 1994년 봄호
- 한국개발연구원(1985),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1987), 미래사회 변화와 한국교육의 과제, 연구자료RM 87-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백연구실(1993), “한일청년층의 미래의식 비교”, 포럼21, 제8집, 한백연구재단
한백연구재단 편집실(1991), “미래학자들의 비교”, 포럼21, 제2집, 한백연구재단
한백연구재단 편집실(1993), “21세기 전망과 청소년육성”, 포럼21, 제7집, 한백
연구재단

한준상(1994), “교육개방과 한국교육의 개혁과제”, 포럼21, 제9집, 한백연구재단
한준상(1994), “교육시장개방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UR협상의 영향과 교육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전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1994.4.22

한준상(1994), “대학교육시장의 개방”, 한국교육개혁론, 서울: 학지사.

한준상(1995), “교육세계화의 함정”, 우리교육, 1995년 2월호

한준상(1995), “세계화와 신세대 교육론”, 세계화와 신세대, 청소년 국제교류준
비활동 워크샵, 1995. 8. 3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함병수외(1991),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황병일(1995), “세분시장 속의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욕구 전략”, 특집 틈새시
장을 잡아라, 광고정보, 1995.3., 한국방송광고공사.

金子照基 編著(1994), 現代公教育の 構造と 課題:轉換器社會の 教育改革への
展望, 東京:學文社

矢野眞和(1991), 試験時代の 終焉-選抜社會から育成社會への轉換, 東京:有信堂.

靑少年育成國民會議(1994), 21世紀に 向けての 靑少年育成構想, 東京:靑少年育
成國民會議.

日本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編, 산업연구원 지역2실역(1986), 일본 21세기 산
업사회의 기본구상, 서울: 산업연구원

靑少年育成國民會議(1994), 21世紀に 向けての 靑少年育成構想, 東京:靑少年育
成國民會議.

Bell, D., 서규환 역(1991)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서울: 디자인하우스

Bell, D.(1993),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서울: 디자인 하우스

Drucker, P .F, 고병국역(1992), 미래의 기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Drucker, P. F., 이재규역(1993), 자본주의이후의 사회,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E.F. Schumacher, 원종익 역(1992),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원음사

Friedman, M., 안재욱·이은영공역(1994),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서울: 나남

- Hall, S., Kay, I. and Stuthers, S.(1992), The experience of Partnership in Education : parents, professionals, and children, Dereham : Peter francis Publishers.
- Kagan, S.(1991), United We Stand : Collaboration for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N.Y.: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Kennedy, P., 변도은·이일수역(1993), 21세기의 준비,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Marquardt, M. · Reynolds A.(1994), 송경근 역, 글로벌 학습조직,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McCormack Gavan(1994), “일본사회의 심층구조와 국제화”, 창작과 비평 1994년 여름호
- Naisbitt, J., 서문호역(1983), 메가트렌드 제4의 물결, 서울: 안산미디어
- Naisbitt, J., 정성호역(1994), 글로벌 패러독스, 서울: 세계일보.
- Naisbitt & Aburdene(1990), 메가트렌드 2000,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1994), "changing the Paradigm to community Youth Development : Post-Conference Report", Jan. 30-Feb.2, 1994, Washington, D.C., Symposium '94.
- 네그로폰테(1995), 「Being digital」, 동아일보 1995.11.3
- Reavis, C.A. and Griffith, H.(1992), Restructuring Schools: theory and practice, Lancaster : Technomic Publishing Company, Inc..
- The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1994), "Changing the Paradigm to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ost-Conference Report, Symposium '94
- Toffler, A., 이규행 역(1989), 제3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Toffler, A., 이규행 역(1990),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Toffler, A.(1995), 토플러 인터뷰기사, 중앙일보 1995. 4.17

21세기에 대비한 청소년 육성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인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청소년 육성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청소년육성 분야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정보화』, 또는 『세계화·개방화』로 대변되어지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본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델파이 조사방법의 절차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델파이 조사란 미래예측과 정책대안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직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미래예측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본 설문지는 저희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파악한 자료와 기초면접을 통해 얻은 정보를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문항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추후 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지는 제2라운드에 해당하는 설문지로서 조사지의 각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시어 1995년 월 일까지 도착되도록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 10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이광호 올림

문의 및 회신 담당자 : 이광호, 박미랑

☎ (02) 576-2892(직통), 578-3984 구내 140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제 1 회 질 문 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행구좌를 하나만 적어주십시오(시중은행 어디나 가능합니다).

은행 / 계좌번호:

/ 이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들에 대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가능한 한 복합적인 문장은 피하시고 단순한 문장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향후 미래사회는 어떤 특성을 지닌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청소년의 생활이나 육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화의 특성 5가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바람직하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전망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2. 1번 문항에서 기입한 내용에 근거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 분야나 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개혁분야나 요소는 무엇인
지 우선 순위를 정해 순서에 따라 3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3.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는 향후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어떤 양상으
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중요한 변화 양상 3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희망하는 상황이 아닌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미래사회의 특성으로 미루어 선생님이 예상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은 어떤 유형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5. 현재의 청소년육성 정책이나 체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단체를 중심으로한 활동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육성체제를 21세기에 대비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혁하고자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6. 흔히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文明史적 大轉換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 입시를 비롯한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육성도 이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다른 용지에 추가로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

☞ 선생님의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